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이연호 이동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요약

협력과 통합을 핵심으로 하는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지역 공동체 구성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협력이 정치·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가간의 군사·안보적 갈등이 약화된 가운데 사회·경제적 협력과 교류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의 형성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창설과 같은 경제적 지역주의의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아세안(ASEAN) + 3’,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강화 등 다양한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설치와 동북아시아대위원회로의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동북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이나 공동체 구성의 실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은 미진하기만 하다. 이는 무엇보다 탈냉전 이후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민족주의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역적 연대감과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동북아 물류중심’ 등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공동체 구성 논의는 자칫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논리나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낡은 패러다임 속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동북아 공동체 실현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공동체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주목하고 동북아문화공동체(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은 동북아문화에 기초한 공동체(Community based on Northeast Asian Culture)라는 의미와 동북아라는 지역에 기반한 문화공동체(Cultural Community based on Northeast Asian Culture)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아울러 문화공동체의 형성은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전자가 역사와 문화의 총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문화적 유산의 동질성 회복과 활용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는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통성과 보편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구상이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단절이나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의미한다.

지역통합의 선행사례인 유럽의 공동체 형성과 통합과정은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문화적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당초 유럽의 지역적 통합은 경제적 실익과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통합과정이 진행될수록 항구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유럽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의 추진은 유럽통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유럽은 역사·문화적으로 종교와 장원, 민족국가의 형성 등 내적 교류 작용과 국가간 경쟁, 십자군전쟁 등 외적 타자성의 인식 등을 통하여 공통의 문화와 표준을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근대화과정에서는 상호 교류와 대외 진출, 그리고 식민지 침략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중심적 사고와 공동운명체로서의 인식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유산으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를 확립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울인 노력은 단순히 유럽의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협의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았다. 유럽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은 교육과 직업훈련, 청소년 교류 등 광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전개되었으며, 특히 역대 성원들을 유럽 시민으로 함양하기 위해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으로 뒷받침되었다. 즉 유럽문화공동체는 역사와 문화의 총량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에 기반을 두면서도 단순히 거기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산을 활용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와 달리 동북아는 역사적으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느슨한 상호 작용과 교류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중국의 영향력 약화와 외세 침입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탈(脫)중국적이고 독자적

인 민족국가 만들기에 치중해 왔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가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인식 역시 차이를 보인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화주의로 무장되어 있으며, 해양세력인 일본은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근대화과정으로부터 시작된 ‘선택된 탈아론(脫亞論)’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사대와 선린의 대외관계를 통해 지역 강국들 사이에서 국가들 간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편입된 굴욕적 지배를 경험함으로써 민족주의에 근간을 둔 사고와 지역적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다. 과거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는 중국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이런 의미에서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로의 접근은 자칫 중국중심적 문화질서의 복원으로 귀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대론’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동북아 담론은 ‘중심주의’가 낳을 수 있는 폐해와 오해를 불식하고, 관련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동북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시아대는 ‘유산으로서의 동북아’가 아닌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를 지향해야 한다.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는 역사의 창조적 계승뿐만 아니라 각국 사이의 관계 정상화,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관계 정상화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국가간 신뢰 구축을 위해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군사·안보적 불신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지역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존재한다. 중일간의 경쟁관계와 한반도 문제는 역내 정치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역내 국가들의 상이한 경제체제와 중국의 경제력 부상 등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경쟁관계와 입장차이가 심화되고 있다. 셋째, 탈냉전 이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넷째,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지역적 개념과 범주, 과거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기인하는 인식론적 차이가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동북아 공동체의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민족이나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지역을 단위로 한 인식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공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유사성과 동질성을 넓혀 나가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 역사의 굴곡과 문화적 변질을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리문화적(geo-cultural) 정체성을 되찾는 노력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더욱이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문화적 접근은 한국에 있어서도 많은 강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해외거주 한국민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 정보·통신 기술에서 가진 우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교류와 연대사업을 주도할 수 있다.

유럽의 공동체 형성에 대한 고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동북아 공동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동북아적 표준설정을 위한 문화적 협력과 동시적이고 중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의 교훈은 또한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재설정을 통한 “참여적 동북아문화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국가는 폭발하는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에너지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 내부적 역동성과 국제적 역동성을 조화롭게 접합시켜야 한다. 곧,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시장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얽혀 새로운 초국가적 실체를 만들어내는 스파게티 모델의 지역적 협력과 개별국가의 주권이 존중되는 가운데 국제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샐러드 모델의 지역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럽의 공동체 수립과 추진과정은 문화적 측면의 협력이 다른 층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상이 동북아 문명공동체로의 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유럽문화공동체의 경험을 통해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 공동체의 수립을 위하여 약소국가들의 연합인 동남아 국가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동남아 지렛대론’은 중국과 일본이

라는 지역적 강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이나 중국의 ‘동북 3성’ 수준으로 환원되는 동북아론을 경계하는 방안이다. 이는 동시에 미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역내 국가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약소국들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적 토대에 기초한 ‘동북아시대’를 창출해 내야 한다. 문화 영역은 정치·경제 영역의 부차적인 사안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문화적 연대감과 정체성 수립은 통합과정에서 역내 구성원들의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통합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적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셋째,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는 특정 대국 중심의 문화적 통합이 아닌 국가간 ‘다양성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한다. 문화·교육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는 중·소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때 보다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한류’ 열풍과 더불어 대중문화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한반도 6·25 전쟁 등의 전쟁유산을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동북아 문화재단과 같이 동북아 내 각종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재단의 설립을 주도함으로써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넷째,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 공동체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동북아의 정체성과 동질적인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의 공동편찬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세대들에게 아시아의 복원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북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공동체 구성은 이상적 계획이나 관념적 인식이 아닌 실천적 과제이자 프로젝트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 공동체 구성은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의 인식론적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문화적 접근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화 교류와 공동의 교육·연구 확산, 동북아 공동의 지식 축적이야말로 상호 이해와 인식의 폭을 증대시키고 동북아 공동체 구성의 뼈대를 보다 공고하게 다져나가는 길이다.

목 차

I. 서론	1
II. 문화공동체에 대한 접근방법	7
1. 공동체로서의 문화	9
2. 문화공동체 형성의 두 가지 길: 유산과 프로젝트	14
III. 유럽문화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19
1. 유산으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	22
2. 프로젝트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	38
IV.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51
1.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	53
2.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	64
V.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과 동북아의 비교와 교훈	85
1. 유럽과 동북아의 비교	87
2.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훈	90
V. 결 론	97
참고문헌	103
최근 발간자료 안내	114

I

서론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안보 협력과 공동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근래 들어 동남아와 동북아 지역을 연계하는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3(한국, 중국, 일본)’에서부터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강화, 그리고 한국·중국·일본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공동체 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와 접근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지난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중국·일본 사이의 에너지 개발협력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 그리고 동북아개발은행(NEADB: 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설립 등을 제시한 이래, 2003년 초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다.¹

사실상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안보·경제 협력과 지역공동체 논의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정치·경제적 통합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rea)의 형성 등 탈냉전 이후 군사·안보 개념으로부터 경제 개념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체제의 환경 변화에도 영향을 받은 바 크다.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가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비교적 둔감하게 반응하여 왔다. 비록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1967년 창설된 지역협력체인 아세안의 확장과 단합을 통해 상호 발전과 협력을 모색하여 왔으나, 동북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의 협력체를 구성하

¹ 참여정부는 현재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동북아시아추진위원회’로 바꾸고, 과거 분절적·순차적 지역협력이 아닌 정치·경제·안보·문화 영역의 총체적 접근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4년 7월 26일.

지 못한 채 그 실무적인 논의들이 미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1999년 11월 개최된 ‘아세안 + 3’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미 경제적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정치·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유럽 지역의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이들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경제협력이나 공동체 구성의 실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예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동체 구성의 구체적인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역내 주요 국가들 사이의 정치·안보적 이견이 크고, 그밖에도 크고 작은 다양한 요인들이 경제협력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역내 협력과 지역공동체 구성이 부진한 근본적인 원인은 탈냉전 이후 역내 국가들 사이의 민족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결과 각 국가들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지역적 연대감과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근래 들어 동북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역내 교역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조차 체결되어 있지 못한데, 이것은 지역 강국으로서 중국과 일본이 서로 화합을 이루지 못한 채 역내 국가간 정치·문화적 동질성을 확립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²

한편 근래 들어 한국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관한 논의는 자칫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동북아 공동체 실현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³ 그것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연대나 공동체를 주장하는 기존 논의들 중에는 상호 협력과 공존

² 안병준, “몽치는 EU … 흩어진 동아시아,” 『중앙일보』, 2004년 5월 15일.

³ 전영평·박경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동북아 상호이익과 갈등극복을 위한 방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2003), p. 11.

이라는 기본적인 인식과 패러다임을 무시한 채 주로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주장들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동아시아 연대와 공동체 구성을 위한 기존 논의들 중에는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논리나 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넓은 틀 속에서 강대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이나 경제협력체 구성이 만능인 양 주장되기도 한다.⁴ 따라서 현재 한국이 주장하는 동북아 공동체 논의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득력을 지니고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공동체의 실질적 이익이나 효과를 선전하는 것 이외에도 역내 국가간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초하여 이 연구는 동북아문화공동체(Northeast Asian Cultural Community)에 주목하고 있다. 동북아문화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첫째, 동북아문화에 기초한 공동체(Community based on Northeast Asian Culture)라는 의미이다. 둘째, 동북아라는 지역에 기반한 문화공동체(Cultural Community based on Northeast Asian Region)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다기한 의미를 지닌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논함에 있어 이 연구는 먼저 공동체로서의 문화가 지니는 의미를 살펴보고,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를 나누어 고찰해볼 것이다. 이어서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라는 틀로 나누어 유럽문화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의 목적인 두 지역간 비교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어서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역시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로 나누어 고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양대 지역 문화공동체의 기본 인식과 형성과정을 유산과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비교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그 공통성과 차별성을 인

⁴ 최민자, “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동아시아론: 동아시아론을 위한 소고,”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1호 (1998), pp. 78-9.

식하고,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갖는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여 동북아문화공동체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정책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화공동체에 대한 접근방법

1. 공동체로서의 문화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사유체계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 개념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매개하는 유·무형의 광의적 개념으로서 국내외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국내외적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은 부차적인 차원으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문화는 단순히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적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문화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개인의 평화와 번영은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특정한 지역에서의 문화공동체란 특정한 표준을 중심으로 형성된 질서를 의미한다. 이러한 질서는 일정한 표준을 중심으로 문화적(cultural), 물질적(materialistic), 제도적(institutional) 차원들에 존재하는 특정한 정형(패턴)으로 구성되며, 그러한 정형(패턴)을 따라 이루어지는 나선형적 동학을 통해 다시 표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문화적 차원에서의 변화는 다른 차원에서의 변화만큼이나 즉각적이고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결코 이것이 국제 권력구조의 잔여물은 아니다.

문화는 특정한 시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피레네 산맥의 한편에서 문명인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야만으로 받아들여진다.⁵ 이런 의미에서 월러스타인(I. Wallerstein)이 말하는 지문화(Geoculture)란 동어반복(tautology)이다. 문화는 공간적으로 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家族), 동리(洞里), 지방(地方), 국가(國家), 국제적 지역(國際的 地域) 등의 다층적 동심원적 구조(多層的 同心圓的 構造)와 결부된다. 시간적으로 문화는 개인의 수명(壽命), 세대(世代), 기억(記憶), 역사(歷史), 교육(教育)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모든 문화는 변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변화와 시간의

⁵ Blaise Pascal, *Pensée*, 1670.

관계이다. 따라서 모든 문화공동체는 지정학(Geopolitics)적 차원 뿐만 아니라 시정학(時政學, Tempopolitics)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 개인의 수명과 비교하여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과도하게 빠르게 변화할 때, 그것은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문화안보(Culture Security)라는 개념도 상정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의 인위적 압축을 동반한 세계화는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문제를 더욱 첨예화시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가들보다 세계화에 적응해야 하는 국가들 안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문화공동체는 한 개인을 둘러싼 지정학적이고 시정학적인 동심원적 구조(同心圓的 構造)이다. 예를 들어 유럽문화공동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형성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유럽 내의 개인, 장원, 도시, 연맹, 국가 등이 상호 연관성을 빚어내며 안으로부터 유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외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의 외적 경계선이 분명해지고, 타자성(othersness)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유럽이라는 시공간이 확정되는 과정이다. 그 동안 많은 유럽학자들은 첫 번째 측면에 주목하여 유럽의 시공간적 개념을 분석해 왔다. 따라서 유럽 외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중세 유럽에 있어서 한 개인은 그 탄생과 더불어 여러 층위의 표준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것은 유럽연합을 지탱하고 있는 보충성(subsidiarity) 원리의 연원이다. 우선 가족적 표준이 있었고, 자신이 속해 있던 장원의 표준이 있었으며, 기독교세계(Christendom)의 표준이 있었다. 가족적 표준을 대표하는 존재가 가부장이었다면, 장원적 표준은 봉건영주에 의해, 기독교 세계의 표준은 교황에 의해 각각 대표되었다. 중세 유럽이 근대 유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국가주권은 일개인을 둘러싼 동심원적 표준구조의 외원(外圓)수축동학(shrinking dynamics of outer circle)과 내원(內圓)팽창동학(expanding dynamics of inner circle)의 상호 길항관계 속에서 탄생하였다. 외원(外圓)수축동학이란 교황적 표준이 관철되던

공간(sacerdotium)의 수축에 관한 것이었으며, 내원(內圓)팽창동학이란 봉건영주적 표준이 관철되었던 공간(regnum)의 팽창에 관한 것이었다.⁶

오늘날의 유럽문화공동체도 이와 유사하다. 유럽문화공동체는 과거의 교황적 지위에 버금가는 미국 중심적 세계화의 힘과 국가주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 사이에 위치한다. 세계를 외원(外圓)으로 보고, 국가주권을 내원(內圓)으로 본다면 유럽문화공동체는 외원(外圓)수축동학(shrinking dynamics of outer circle)과 내원(內圓)팽창동학(expanding dynamics of inner circle)의 접합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문화공동체 역시 세계화의 기회를 극대화하고, 세계화의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한편 ‘문화’(culture)를 “행위 정향들의 상징이 유형화되거나 질서화된 체계이며, 개인 행위자들의 개성이 내면화되고, 나아가 사회체제로 제도화된 양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⁷ 문화는 유산이나 사회적 전통으로부터 전수되며, 단순히 인간의 표현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이고, 인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공유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의 본질적 핵심은 전통적 이념들과 이것들에 부착된 가치로서 전통적 상징에 의해 습득되고 전달되는 의식적·무의식적 양태들로 구성되며, 인간집단들의 독특한 업적들로 형상화된다.⁸ 즉, 우리가 하나의 문화 속에서 산다는 것은 그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나 여러 가지 특질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며,

⁶ 이상의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Martin Wight, *Systems of State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7), p. 47; Martin Wight, *Power Politic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8), p. 25; Andrew Linklater, “Citizenship and Sovereignty in the post-Westphalian European State,” Archibugi, Daniele, David Held and Martin Köhler ed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13; Robert H. Jackson,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40.

⁷ Talcott Parsons,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1967), p. 327.

⁸ Julius Gould and William L. Kolb eds., *Dictionary of Social Science* (New York: Free Press, 1964), p. 165.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⁹

따라서 문화는 표준화된 습관이나 규칙적인 행태를 유발시키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로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지속시키는 공동체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사회화(socialization)로 지칭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화는 그것이 협의적 개념이던지 혹은 광의적 개념이던지 간에 특정한 공간이나 민족, 언어 등을 기초로 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각각의 공동체를 규정하고 특화시키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작용한다. 흔히 우리가 인지하는 문화의 보편적 개념들 속에는 동질성이나 이질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분하는 제반 양식과 기준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공동체의 특질을 강조하는 민족이나 언어, 가치관 등을 통하여 보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민족이나 언어, 가치관 등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공동체의 차이와 구분이 단지 인간의 의식 속에서 형성되는 상상의 산물이라면, 각각의 공동체가 표출하는 특질로서의 문화 또한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 혈연관계나 공통의 언어와 역사, 종교 등 문화적 유산으로 표현되는 것이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고유한 문화적 특질을 공유하는 것은 민족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표현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매우 부정형적이며, 혼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사실상 문화적 정체성이나 민족성은 그 자체가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온 것이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동체의 삶을 구분하는 민족이나 문화의 기준은 과거 식민지 팽창시기의 분할과 식민지배 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였던 종족 개념과 인종주의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¹⁰ 따라서 민족이라는 것이

⁹ 한국문화인류학회 엮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서울: 일조각, 2003), pp. 29-30.

¹⁰ Grant Evans, "Introduction: Asia and Anthropological Imagination," Grant Evans ed., *Asia's Cultural Mosaic: An Anthropological Introduction* (New York and London: Prentice Hall, 1993), p. 3; Beverly Crawford, "The Causes of Cultural Conflict: An Institutional Approach," Beverly Crawford and Ronnie D. Lipschutz eds., *The Myth of "Ethnic Conflict":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al" Violence* (Berkeley: International Area Studies,

단지 같음과 다름을 가르기 위한 인위적 구분이거나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친교의 이미지로 살아 있는 상상의 개념에 불과하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표출되는 문화 또한 상상의 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¹¹

한편 우리는 기존의 공동체 사회를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에 따라 구분함에 있어서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와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를 거론하게 된다. 여기서 자문화 중심주의란 단지 자신들의 문화에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나 비판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까지를 포함한다. 반면 문화적 상대주의란 자신의 문화적 가치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유일하고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타자의 문화적 차이를 보다 깊게 이해하려는 태도이다.¹² 흔히 지나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칫 문화적 특질을 달리하는 사회나 공동체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기 쉽고, 문화적 상대주의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가져오는 동질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8), p. 18.

¹¹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p. 5.

¹² 한국문화인류학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p. 30.

2. 문화공동체 형성의 두 가지 길: 유산과 프로젝트

그렇다면 서로 다르게 구성된 사회나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결집되고 통합됨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방법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는가? 흔히 특정한 집단과 사회의 문화적 차이는 그 자체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통하여 구분될 수 있으며,¹³ 이러한 구분은 공동체의 특질을 문화적으로 규정하고 판단함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각기 분화되었던 공동체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이성과 특수성을 약화시키고 유사성과 보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적 유사성은 곧 서로 다른 공동체간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문화적 동질화와 결합을 촉진시키게 되며, 이것은 다시 정치·경제적 공동체로 확산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화를 통하여 하나의 문화로 동질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각기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다양화 현상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흐름 속에서 문화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문화로 동질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화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의 공동체는 정치·경제적 지역 공간(area space) 개념을 바탕으로 물리적 공간을 나타내는 지리적 영역(geographical area)과 사회관계를 말해주는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집단을 나타내는 공통의 연대(common tie)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논의될 수 있다.¹⁴ 즉,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간, 국가간, 공동체간 물

¹³ 이른바 최대유사체계와 최대상이체계 분석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방법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Adam Przeworski and Henry Teune,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1970), ch. 2를 참조할 것.

¹⁴ 정현숙,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북아 가족론: 정서적 통합을 위한 과제,”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324.

리적 근접성 및 지리적 독자성, 상호의존성, 그리고 동질성 등 세 가지 조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 우선 물리적 근접성이나 지리적 독자성은 지리학적 지표에 의해 그 경계가 나누어지며, 근래 들어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그 지역적 경계와 범주가 점차 넓어지고 희미해지고 있다. 상호의존성이란 정치·경제 등의 연관관계에 입각하여 상호 교류가 심화되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지역적 연계성을 의미하며, 동질성이란 가치체계와 정향, 역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방식 등 사회·문화적 유사성이 일련의 연계작용을 통하여 지역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나의 지역적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은 그 범위와 지리적 근접성이지만, 오늘날에는 국제사회의 조류인 세계화과정의 폭넓게 진행됨에 정치·경제·문화적 근접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¹⁶ 특히 탈냉전 이후 국가간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던 군사·안보적 개념이 약화되고 경제교역과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한 지역적 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지리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한 상호의존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연대와 교류·협력의 기저에는 바로 사회·문화적 유사성과 연계작용에 기인하는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이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간 표출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역사와 문화적 유산 속에서 상호 유사성과 보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하나의 지역공동체와 통합을 형성하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시도되고 있다.

결국 민족이나 언어, 국가 등에 기반을 둔 상상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지역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과제로서 국가간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주의에 기초한 국가간 갈등이

¹⁵ Bruce M. Russett,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 Study in Political Ecology* (Chicago: Rand, McNally & Co., 1967).

¹⁶ Edward E.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ummer 1999), pp. 590-592.

나 지역적 경쟁이 심화된 과거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한 지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적 통합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교류와 협력에 앞서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찾아 동질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입각하여 국가간 다양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상호 공통적이고 유사한 문화를 접목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정치·경제적 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걸맞는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를 고려해 볼만하다. 여기서 우리는 ‘유산으로서의 공동체’가 아니라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를 지향해야만 한다. 현실적으로 ‘유산으로서의 공동체’에서는 역사와 문화적 유산의 총량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에서는 문화적 유산의 동질성 회복과 활용이 보다 중요하게 간주된다. 과거 국제적으로 냉전시대의 산물이 분할(divide)과 봉쇄(containment)였다면, 현재 새로운 시대의 핵심어는 협력(cooperation)과 통합(integration)이다. 따라서 과거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를 새롭게 인식하고, 상호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되 공통성과 보편성을 확장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 구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단절이나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과거 역사와 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의미한다.

현시적 차원에서 ‘유산으로서의 공동체’를 지양하고,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 인식과 문화적 전통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문화적 교류와 인식의 공유를 확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른바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는 바로 과거 역사적 갈등과 문화적 인식의 차별성을 상쇄시키기 위한 국가간 교류의 폭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역사와 문화적 유산의 총량적 평가나 대립, 갈등의 요인들을 감소시키고, 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동북아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

진되어야 한다.

문화공동체의 개념을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가 공동의 문화적 유산에 기초한다면, 후자는 유산의 총량(總量) 보다 유산의 활용(活用)에 주목한다. 전자가 복원을 지향한다면 후자는 창조를 지향한다. 유럽의 경험은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고대 그리스 유산과 기독교 유산에 기초하지만, 이러한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주도되었다. 반드시 유산의 원천인 그리이스가 주도했던 것은 아니며, 한 때 유럽질서를 주도했던 영국은 뒤처져 있다. 동북아의 경우, 유산의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지위가 압도적이다. 더구나 그리이스나 바티칸과 달리 중국은 현실적 역학관계에서도 압도적 지위를 구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에 대한 집착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탐원공정(探源工程),¹⁷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연상시키고, 세계적으로 중화질서(Sinocentric order)의 부활이라는 모습으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동북아문화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는 유산의 총량보다 유산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¹⁸

¹⁷ 전설로만 알려졌던 삼황오제(三皇五帝) 시대를 모두 역사적 사실로 만드는 작업으로, 2003년 11월부터 중국 정부가 중국 문명의 역사를 5000년에서 최고 1만년 전까지 끌어올려 중국이 문화적으로 세계 최고·최대의 나라임을 선포하려는 목적에서 공식 추진하고 있다.

¹⁸ 이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스테판 다나카,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아리프 딜릭,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창작과 비평』(1993년 봄호); 아리프 딜릭,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III

유럽문화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당초 유럽의 지역적 통합은 경제와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을 갖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진행될수록 유럽적 정체성의 형성이 항구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능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필수조건이라는 공통적인 인식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궁극적으로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근거한 유럽인들의 정체성, 즉 유럽 시민이라는 의식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개별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유럽 연합의 차원에서 유럽 공동의 역사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유럽 공동의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상호 존중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유럽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문화’라는 개념을 협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광의적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전개해 온 문화적 교류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된 제반 분야들, 즉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청소년 교류 분야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였는지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통합의 역사가 거의 전무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통합을 위한 유럽 국가들의 경험과 노력은 때로 현실적인 적용의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유럽 국가들의 다양한 제도적 노력과 정책들 중에서 적용 가능한 부문만을 활용한다면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유산으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

유럽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은 어떠한 시공간적 차원에서 형성된 것일까? 앙리 르페브르는 수학적·물리학적 공간 개념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공간’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인식론적 차원의 공간과 사회적 차원의 공간, 철학자들의 공간과 인민의 공간을 구별하였다. 이처럼 르페브르가 물리학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을 구별하였다면, 엘리아스는 물리적 시간과 사회적 시간을 구별하기도 하였다.¹⁹ 시간의 자연적 흐름은 동서고금을 통해 동일하였지만, 시간에 대한 개념, 각각의 시간 개념에 입각하여 시간을 재기 위해서 마련된 척도, 그와 같은 척도에 대한 사회적 약속으로서의 제도는 상이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7일을 주기로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따라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은 고대 바빌로니아로부터 유래되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창세기의 시간 개념에 의해 확립된 것이며, 유럽적 표준의 확산과정에서 자리를 잡은 것일 뿐이다.²⁰

유럽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의 형성과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럽 내의 개인, 장원, 도시, 연맹, 국가 등이 상호 연관성을 빚어내며 안으로부터 유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다른 하나는 유럽 외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의 외적 경계선이 분명해지고, 타자성(othersness)에 대한 인식을 통해 유럽이라는 시공간이 확정되는 과정이다. 그 동안 많은 유럽학자들은 첫 번째 측면에 주목하여 유럽의 시공간적 개념을 분석해 왔다. 따라서 유럽 외적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럽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유럽문화공동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타자성에 대한 인식은

¹⁹ Henri Lefebvre, "Production de l'espace," N. Elias ed., *Time: An Essay* (London: Blackwell, 1992), p. 8;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997), pp. 73-75 재인용.

²⁰ 주 7일제 확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김현일, "시간과 서양문명," 『역사비평』 봄호 (2000), pp. 156-157 참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첫째, 이베리아 반도 방면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레콩퀴스타(reconquista: 재수복)를 통해 이루어진 이슬람 문명과의 조우가 유럽의 외적 경계선을 확정하고, 유럽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둘째, 지중해 방면에서 벌어진 십자군 전쟁(Crusade)을 통해 유럽은 하나의 종교적 표준에 따른 단합을 과시할 수 있었고, 유럽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인들은 보다 선진적 타자(ootherness)의 존재를 경험할 수 있었고, 타자에 대한 정복을 통해 자기(selfness)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십자군 전쟁을 통해 교황은 전기독교세계를 통합하는 상징으로 떠올랐지만, 점차 그 권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십자군운동이란 교회에 의해 고무된 중세적인 식민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십자군과 후일 이베리아 반도의 레콩퀴스타, 나아가서 콜럼버스를 선봉으로 하는 아메리카의 콩퀴스타도르는 모두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셋째, 이슬람 문명과의 대결 속에서 파생된 대서양으로의 진출은 유럽적 정체성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서양으로의 팽창은 유럽 내적인 정체성의 확립과정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중해가 도시들의 바다였다면, 대서양은 국가에 적합한 바다였다. 대서양을 향해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도시적 수준 보다는 국가적 수준에 적합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프로젝트가 다시 국가를 만들었다.

찰스 킬리의 말과 같이 “도시가 자본을 담은 그릇으로서 자본의 배분장소로 봉사”²¹하였다면, 국가는 여러 개의 도시들을 담아낸 그릇이었다. 유럽에서 광대한 대서양을 배경으로 벌어진 치열한 경주는 이들 도시들에 의해 뒷받침되었고, 몇몇 도시들 간의 연대를 강화시켜 주었다. 대서양 세계의 팽창하는 외연과 함께 심화되는 내포의 상징처럼 대서양에 조우한 각각의 국가들 내부에서는 새로운 도시들이 만발하였다. 각국이 대서양을 지배하고 또 대서양을 배경으로 번창시킨 문화는 이들 도시들에 잘 응축되었

²¹ 찰스 킬리, 이향순 옮김,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4), p. 83.

다. 대서양의 역사는 각기 바다를 개척했다고 자부하는 항구도시들이 새로운 국가적 표준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의 역사였다. 유럽의 국가가 이들의 배후에 있기도 했지만, 역으로 유럽의 국가적 표준이 이 항구도시들이 주도하는 대서양 개척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지역적 표준들이 국가적 표준으로 통합되는 과정이었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에 따르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유럽적 세계경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다.²² 당시 제노바와 포르투갈 간의 특수한 관계는 지중해적 중심이 대서양 중심으로 옮겨지는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한때 베네치아와 지중해의 헤게모니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제노바는 콘스탄티노플의 함락과 더불어 동지중해의 주요한 전진기지를 상실하고, 서지중해 지역으로 세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서양의 새로운 중심기지로 떠오를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던 포르투갈과의 새로운 후원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포르투갈이 팽창하는 대서양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노바인들의 후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울러 선진적 지식과 유리한 지정학적 조건들을 주체적으로 통합하여 대서양을 향한 원심력의 토대를 마련한 포르투갈 왕실의 구심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포르투갈 왕실 소유의 사그레스 궁전에는 각지의 우수한 조선기사, 항해기술자, 세공업자, 탐험가, 지리학자, 천문학자 등이 모여들어 연구, 조사, 항해 등에 관한 지식을 나누었다. 어부와 선원, 토목기사와 탐험가, 지리학자와 수학자, 천문학자와 세공업자 등이 숙식을 함께 하며 한 장소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벌이게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확실하게 지식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었다.²³ 이와 같은 두뇌들의 집결과 아울러 사그레스 궁전에는 각종 기행기와 지리서적, 각국의 지도와 항해 관련 서적들이 모두 수집되었다. 그것은 일종의 도서관이기도 했다. 사그레스 궁

²² 이매뉴얼 월러스틴, 나종일 외 옮김,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서울: 까치, 1999), p. 33.

²³ Peter Coulmas, *Les citoyens du monde: Histoire du cosmopolitisme* (Paris: Albin Michel, 1995), p. 191.

전에 자료가 집중됨에 따라 자연히 이들 자료들을 열람하고 싶어 하는 전문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모여들게 되었고, 이들 전문가들이 나누었던 대화와 연구는 다시 기록으로 남겨져 사그레스 궁전에 보관되었다. 1450년경 대서양의 리스본은 지중해의 베네치아와 같이 유럽 팽창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이 당시 리스본의 인구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리스본을 중심으로 한 포르투갈의 대외팽창에 있어서 두뇌적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바로 사그레스 궁전이였다.

사그레스 궁전에서부터 시작된 포르투갈의 정복사업은 비록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가져다주었다. 포르투갈 왕실의 사관이었던 고메스 아네스 데 주라라(Gomes Eannes de Zurara)는 “지리적 지식의 한계선이었던 카나리아 열도와 보자도르 콧 너머에 어떠한 땅이 있는 지에 관한 지식을 얻고자 열망했다”고 적고 있다.²⁴ 새로운 지식의 수집과 축적은 동양이 아닌 서양이 세계사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이었다. 새로운 지리적 정보의 축적은 그것이 지리상의 정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식이 서양에 대한 동양의 지식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동양에 앞서 서양이 세계에 대한 자신의 왜소성을 깨달았다는 점이었다.

15세기 이전과 이후에 대서양을 흐르던 물리적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대략적으로 1492년을 기점으로 대서양을 흐르는 사회적 시간은 많은 질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아메리카 문명의 시간적 개념이 유럽인들의 시간적 개념으로 흡수되면서 하나의 대서양적 시간 개념이 탄생했던 것이 중요했다. 콜럼버스와 코르테스는 바로 이러한 정복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콜럼버스에 의해 대서양이 유럽인들의 존재-의식적 차원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면, 코르테스는 대서양세계를 유럽적 표준으로 통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²⁴ John Thornton, *Africa and Africans in the Making of the Atlantic World, 14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p. 15.

에스파냐의 발흥과 함께 지중해 유럽을 대신하는 대서양 유럽이 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파냐에 맞선 네덜란드의 독립은 북대서양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강국이 떠오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에스파냐로 대표되는 카톨릭적 표준에 맞선 새로운 프로테스탄트적 표준의 등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공간적으로는 런던, 암스테르담,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제네바를 연결하고, 계층적으로는 도시의 상공인들을 엮는 국제적 네트워크가 새로운 유럽적 표준으로 부상하는 것을 뒷받침했다.²⁵

에스파냐가 무적함대로 대표되는 군사적 표준과 카톨릭으로 대표되는 이념적 표준으로 유럽적 질서를 세웠다면, 네덜란드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새로운 이념적 표준과 함께 암스테르담은행이라는 금융적 표준을 세웠다. 리스본이 부상하던 1450년부터 암스테르담은 이미 대서양 무역의 중심도시로 떠오르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에스파냐의 지배 하에 있었다. 암스테르담이 에스파냐의 지배 하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하나의 역사적 수레바퀴에 비유한다면, 그 반대편에는 네덜란드의 건국과정이라는 또 다른 수레바퀴가 돌고 있었다. 암스테르담은 에스파냐적 표준에 대한 대안적인 유럽적 표준의 상징이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적 표준이 생성되고 있었다.²⁶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의 독립이 에스파냐제국은 물론 주변국들로부터 인정받게 됨으로써, 네덜란드 문제를 국내문제로 취급하고자 했던 에스파냐제국과 네덜란드 문제를 이미 국제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다른 유럽국가들 간의 인식적 괴리가 공식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 베스트팔렌조약이 세운 시대적 표준은 “한 지역의 종교는 그 지역 통치자의 종교를 따른다”(cujus regio ejus religio)는 아우그스부르크 평화조약(1555년)의 정신을 더욱 확대 발전시킨 것이었다. 아우그스부르크 평화조약이 루터파와 카톨릭 간의 관계만을 염두에 둔 표준이었다면, 베스트팔렌 조약

²⁵ Wayne te Brake, *Shaping History: Ordinary People in European Politics, 1500-17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n Press, 1998), p. 67.

²⁶ 암스테르담이 대서양 경제의 중심도시로 부상한 시기를 1450년 경으로 보는 견해에 관해서는 윌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 p. 253 참조.

은 이 표준이 기독교 문명권 내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 대상을 확대했던 것이다. 이것은 로마 교황이나 신성 로마 황제의 보편적 권위와 더불어 500여 개 군소 정치적 단위의 개별적 권위가 병립했던 중세 봉건적 이중구조를 대신하는 중앙집권적 절대주의 국가의 등장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치적 공간의 구성양식이 이규적(heteronomous)인 것에서 동규적(homonomous)인 것으로 변환되는 전환점이 마련되었다.²⁷

유럽의 역사는 오랜 세월을 거쳐 에스파냐가 누렸던 특권적 지위가 프랑스로 이양되었음을 보여준다. 폴 케네디는 18세기 유럽에 있어서 그 규모와 인구, 그리고 부에 있어서 프랑스는 항상 최강대국의 위치에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²⁸ 대서양세계에서 에스파냐는 언제부터 몰락했던 것일까? 피에르 쇼뉴는 이에 관해 가장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역사가이다. 그는 페르낭 브로델의 그늘에 가려 훨씬 덜 알려지기는 했지만, 지중해에 관한 브로델의 시각과 방법을 대서양으로 확장시킨 그에 못지 않은 역사가이다. 쇼뉴의 자료는 에스파냐의 대서양무역이 1608년에 정점에 달해 이후 1622년까지 일종의 정체기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쇼뉴는 이것을 일시적인 평화가 가져온 경제적 안정효과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이 정체기에 이어졌던 것은 본격적인 쇠퇴기였다.²⁹ 에스파냐가 쇠퇴하는 기운을 보였을 때, 그것을 즐겼던 것은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와 같은 신흥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에스파냐의 쇠퇴를 환영했던 것은 같은 카톨릭 국가이면서도 에스파냐와 유럽대륙 내에서 지난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던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1660년대에 이르러 대서양세계의

²⁷ John Gerard Ruggie,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47, No. 1 (Winter 1993), p. 151.

²⁸ Paul Kennedy,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pp. 167-183.

²⁹ Pierre Chaunu, *Sville et l'Atlantique* (1504-1650), vol. VIII (2 bis): *La conjoncture, 1593-1650*. (Paris: S.E.V.P.E.N., 1959), p. 889, pp. 1404-1405; 윌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 p. 418 재인용.

새로운 헤게모니국가로 자리를 잡았다. 폴 코올스는 15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투쟁에 주목하면서 “16세기 전반기 국제관계사의 주요 테마는 이탈리아를 둘러싼 프랑스 제국과 에스파냐 제국 사이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³⁰

프랑스가 잉글랜드와는 달리 강력한 중앙집권적 표준을 지향했던 이유는 프랑스가 처한 지리적 위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섬나라였던 잉글랜드는 작은 정부에 의한 통치가 비교적 손쉬웠던 반면 프랑스는 거대한 정부가 없는 국가적 표준을 세우기 어려웠다. 물론 잉글랜드 역시 주변의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고 복속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지만, 프랑스는 자신의 표준을 세울 당시부터 아직 어느 표준의 변방이 될 지도 모를 변방지역을 놓고 베네치아적 표준이나 제노바적 표준, 교황청의 표준이나 에스파냐적 표준 등과 부단한 경쟁과정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서유럽의 평원에서 프랑스와 같은 중앙집권국가가 부상하고 있었던 것은 베네치아나 제노바와 같은 도시국가들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명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 방향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비단길 무역의 종점이자 시발점이었던 베네치아나 제노바는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대서양 진출을 주도했던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이 자신의 독자적 산업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유럽의 창구”에 머물렀던 사정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산업적, 금융적 우위를 구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부상은 베네치아와 제노바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763년의 파리조약은 대서양제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프랑스의 야심을 꺾고 영국적 표준을 중심으로 대서양세계가 재편되기 시작했음을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조약을 통해 프랑스는 대서양세계에 있어서 영국의 절대적 우위를 공인하였고, 대신 남미의 기아나와,

³⁰ Paul Coles, “The Crisis of Renaissance Society: Genoa, 1448-1507,” *Past & Present*, No. 11 (April 1957), p. 41; 윌러스틴, 『근대세계체제 I』, p. 265 재인용.

서인도 제도 상의 과텔루프와 마르티니크와 같은 몇 개의 조그만 해외 영토를 차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프랑스의 편에 가담했던 에스파냐가 플로리다를 영국에게 양도해야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시시피강 이서지역에 위치한 서부 루이지애나를 에스파냐에 넘겨주었다. 인도에 있어서 프랑스는 상업적 기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떠한 군사적 기지도 설치할 수 없었고, 아울러 인도 원주민들과의 어떠한 정치적 동맹도 용납되지 않았다. 북미와 인도의 프랑스인들은 단지 상인으로서 존재할 뿐, 더 이상 제국의 건설자가 될 수는 없었다. 파키조약이 체결되었을 때, 영국의 정치지도자 월폴(Walpole)은, “소국의 역사에 불과한 그리스와 로마의 책을 불사르라”고 말했다. 월폴은 거대한 대영제국의 역사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왜소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월폴의 예언과는 달리 영국의 대서양제국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20년 후인 1783년 영국은 베르사이유 조약을 통해 미합중국의 탄생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합중국과 캐나다가 모두 영어권 국가로 성장하리라는 점에서 월폴의 예언은 타당한 것이었다.

대영제국 통일왕국이 성립된 1707년 이전에 이미 영국적 표준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세 왕국을 통합하는 표준, 그리고 신교도와 구교도들을 통합할 수 있는 표준을 지향하고 있었다. 대서양 방면으로의 진출은 대내적 갈등의 분출을 통해 새로운 통합적 표준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대서양 너머 신세계의 노바 브리타니아(Nova Britannia)는 영국제국의 표준이 통용되는 대서양 좌안의 교두보로서 잉글랜드인과 스코틀랜드인,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을 접착시켜 줄 수 있는 제국의 상징이었다.³¹

1770년대로 접어들면서 유럽세계는 새로운 급변의 시기를 맞이했다. 1770년대 이후 유럽세계가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던 여러 요인들

³¹ Luca Codignola, “The French in Early America: Religion and Reality,” Deborah L. Madsen ed., *Visions of America since 1492*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p. 36.

중의 하나는 급격한 인구 증가였다. 정기적으로 인류를 괴롭혔던 전염병의 기세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었고,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높아지고 있었다. 이 시기 유럽세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대서양간 식량교역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래 전에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유입되었던 감자와 옥수수 등이 인구학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17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감자가 북유럽의 주된 영양공급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옥수수는 남유럽에서 북유럽에서의 감자와 같은 위치를 잡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아일랜드로부터 포르투갈에 이르는 대서양연안 유럽지역의 인구밀도를 높이는데 확실히 기여하였다. 아프리카지역에 있어서도 옥수수와 땅콩 등의 재배가 성공을 거두면서 대서양 연안지대의 인구밀도가 높아졌다. 뉴펀들랜드로부터 아르헨티나에 이르는 대서양 연안 아메리카지역에서도 영양공급원이 다양해지고 풍성지면서 증가하는 인구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사탕수수 재배지역만은 예외였는데, 이들 지역은 과도하게 한 가지 작물에 의존하는 모노컬처 양식으로 인해 영양공급지도에서 최악의 지역으로 기록되었다.³² 1770년대가 대서양의 역사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유럽 국가들 간 헤게모니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미국적 표준이 탄생했기 때문이었다. 대서양세계에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영국식 표준에 대한 반감이 미국과 프랑스를 엮어주기도 했고, 오늘날 이스턴 이스태블리쉬먼트라고 불리는 미국 동부 기득권층이 형성되던 이 때부터 특유의 친프랑스(francophile) 증후군이 자리잡기도 했지만, 신생 미국은 대체로 유럽이라는 아버지보다는 조지 워싱턴이라는 ‘국부’(founding father)로 대표되는 독자적 표준을 따라 행동했다.

1850년에서 1914년까지의 시기에 있어서 유럽세계가 경험했던 것은 여러 모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 시기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 현상과 흡사

³² J. R. McNeill, “The End of the Old Atlantic World: America, Africa, Europe, 1770-1888,” Alan L. Karras and J. R. McNeill eds., *Atlantic American Societies: From Columbus Through Abolition, 1492-188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pp. 246-247.

하다.³³ 전자의 시기는 적어도 유럽세계에서는 보호주의무역에 무역에서 자유주의 무역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던 시기로서 그 기초는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맺어진 콤포텐-쉬발리에조약 (Cobden Chevalier treaty)이었다. 이 조약은 유럽국가들 사이에서 최초로 최혜국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³⁴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화에 있어서 콤포텐-쉬발리에 조약이 차지하는 의미는 1990년대 후반의 세계화에 있어서 국제무역기구(WTO)의 의미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적어도 대서양세계에 한정해서 생활수준이 수렴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전세계적 빈부격차의 심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자의 경험을 통해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현상이 중국에는 빈부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후반의 세계화가 현재의 세계화의 사이에서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19세기 유럽세계에서 나타난 세계화현상이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의 급속한 이동을 통해 이룩된 세계화였던데 비해, 20세기 말의 세계화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규제하면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세기 말의 세계화 역시 이민을 동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정 정도의 자본을 소지할 것을 요구하는 규제 등을 통해 빈부격차의 해소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1851년 5월 1일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유럽세계의 번영과 앵글로 색슨적 표준의 위용을 과시하듯 런던에서 최초의 ‘만국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경이적인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만국박람회에 운집한 각국의 관람객들은 런던이 유럽세계의 중심적인 연구소이며 공장이라고 느꼈다.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영국이 생산하는 증기

³³ Kevin H. O'Rourke and Jeffrey G. Williamson,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p. 5.

³⁴ *Ibid.*, p. 38.

마력은 130만 마력에서 760만 마력으로 비약적인 증대를 보였다. 이것은 같은 기간 프랑스의 40만에서 130만 마력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1900년대에 들어서 유럽세계의 시장적 표준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시간과 공간을 석권하고 나아가 은행통화까지 창조함으로써 전례 없는 힘이 만들어졌다. 시장체제가 최고조에 달한 1914년경에는 지구상의 모든 지역, 지구상의 모든 주민, 그리고 장래에 태어날 세대(世代), 또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허구적 존재까지도 이 체제에 둘러싸여 있었다. 기독교의 전파가 시작된 이래 일찍이 없었던 보편성을 요구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생활양식이 지구상으로 퍼져 나갔다. 그리고 때를 같이해서 칼 플라니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항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변화에 직면한 사회가 취하는 통상적인 방어행동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회의 골격을 침해하려는 혼란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이 혼란은 시장이 만들어 낸 생산조직 자체를 파괴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대안적 표준의 등장으로 유럽세계는 크게 양분되기 시작했다.

자본은 유럽세계를 통합시키고, 다시 비유럽세계를 유럽세계로 편입시키는 표준적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다. 실천가에 앞서 이론가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00년 현재, 유럽의 식민열강은 아프리카의 90.4%, 폴리네시아의 98.9%, 아시아의 56.6%, 오스트랄리아의 100%, 그리고 아메리카의 27.2%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불과 수천 명의 영국 식민관료들이 3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 인구를 좌지우지하였다.³⁵ 1914년에 이르러서 유럽이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한 영토는 전세계 면적의 85%에 달했다. 유럽으로부터 독립한 미국도 새로운 식민열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흡스봄이 명명한 대로 이 시대는 ‘제국의 시대’라고 할만한 것이었다.³⁶ 제1차 세계대전의 전야에 이르기까지 대서양 우안의 유럽인들은 아름다운 시대(belle époque)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 자신들의 표준에 확

³⁵ V. Lenin, “The Advance of Imperialism,” *Collected Works* [1916], Vol. 22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64), p. 254; Richard Overy ed., *Atlas of the 20th Century* (London: Times Books, 1996), p. 18.

³⁶ 에릭 흡스봄,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8).

신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표준의 확산이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자기 파괴적 성격은 유럽인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표준에 대한 자기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어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전쟁을 통해 어떤 유럽국가도 결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전쟁의 추이는 새롭게 성장하는 비유럽국가, 즉 미국의 참가로 큰 영향을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은 1814년에서 1914년까지 지속된 것으로 일컬어지는 유럽협조체제(The Concert of Europe)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 구유럽과 신유럽(미국을 지칭)을 통괄하는 대서양세계에서 미국은 ‘현대의 로마’로 부상하며, 세계적 표준의 입법자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이미 세계총생산량의 33%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력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군사력이 대규모로 대서양을 건너는 최초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까지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국가가 수십만의 군대를 신속하게 유럽대륙으로 이동시켰던 것이다. 이것은 대양을 넘어 이루어진 원정으로서 전대미문의 규모와 영역을 지녔던 것으로서, 국제경기장에 막강한 신인 선수가 등장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 유럽의 국제문제에 대해 최초로 미국적 표준에 따른 해결을 추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경주되었다는 점이다. 월슨의 14개조는 유럽의 지정학에 미국의 힘을 통해 강화된 미국의 이상주의를 불어넣은 것이었다. 14개조는 전후 체제의 대강을 스케치했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유럽에서의 구체적인 영토 문제(알자스-로렌 지방의 프랑스로의 복귀) 이외의 비밀외교 포기, 항해의 자유, 경제적인 기회의 균등, 군비축소, 민족자결, 국제연맹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독일이 월슨의 14개조를 수용하는 형태로 정전에 응했던 것은 종전이 무조건 항복이 아니라 조건부의 것이었음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 주도형 대서양질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미국의 월슨 대통령은 그에 걸맞게 협상과정에서부터 영어가 프랑스어와 더불어 대등한 공식 언어로 대우받아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³⁷

당시까지 미국은 에스파냐적 표준이나 프랑스적 표준, 혹은 영국적 표준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미국적 표준을 유럽 국가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위치로 변화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였다.³⁸

1945년에 끝난 제2차 세계대전과 1990년에 끝난 냉전은 국제관계사에 두 개의 마칩표를 찍었다. 1945년은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이 꿈꾸었던 유럽적 야망에 종지부를 찍었고, 분단된 독일을 남겨 놓았다. 1945년 소련은 유럽 최강의 국가로 부상했지만, 1990년 소비에트제국은 해체의 운명을 겪었다. 이 두 연도 사이의 기간은 ‘냉전’이라고 일컬어진다. 그것은 각기 초강대국에 의해 주도되는 두 이데올로기 진영 간의 대결이었고, 전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것이었다.³⁹ 제2차 세계대전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최초의 세계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대서양뿐만 아니라 세 개의 대륙과 태평양에 걸쳐 동시에 진행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외부의 세계에 대해 자신의 표준을 확대할 수 있게 해준 주요한 계기였다. 오늘날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최대의 성공적 업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를 꼽는다.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이미 미국은 자신의 표준을 유럽의 국제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인들은 유럽문제에 개입하기 보다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의해 보호되는 ‘대륙적 섬’에 갇힌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자국적 표준의 세계화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확고하게 재인식하게 되었다. 루즈벨트의 뒤를 이은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적 삶의 방식(American way of life)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전세계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미국적 삶의

³⁷ 이리에 아키라, 이종국·조진구 옮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서울: 을유문화사, 1999), p. 84.

³⁸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p. 4.

³⁹ Lawrence Freedman, “The Confrontation of the Superpowers, 1945-1990,” Michael Howard and Roger Louis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53.

방식의 확대를 뒷받침해주었던 것은 바로 미국의 막대한 경제력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은 전세계 총생산량의 약 50%를 담당했다. 이것은 당시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두 개의 물건 중 하나는 미국산(made in U.S.A.)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소련에 비해 1945년의 유럽은 “젓더미이고 납골당이며 전염병과 증오심을 퍼뜨리는 곳”이었다. 유럽적 표준은 더 이상 세계적 표준이 되기는커녕, 다른 표준을 추종하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대서양적 표준이 점차 앵글로 색슨적 표준, 특히 미국적 표준과 동일시되면서 과거 대서양적 표준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했던 유럽대륙의 국가들은 독자적인 표준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회복을 위해 미국적 표준의 도입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경제적 회복은 유럽인들의 ‘재유럽화’를 위한 시도를 자극하였다. 유럽인들의 관점에서 미국은 유럽사회의 발전모델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불과 200년 전에 생명, 재산, 사상의 자유라는 극히 추상적인 이념을 내걸고 낯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인공국가인 동시에 엄청난 자원과 경제력을 지닌 국가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러한 나라의 표준은 오랜 세월 동안 좁은 땅 위에서 많은 사람이 빈번한 접촉을 통해 희소한 자원을 나누고 살아온 유럽인들의 표준과 일정한 틈새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독자적인 유럽적 표준을 지향하는 범유럽주의는 역사적으로 교황 중심의 교권주의(criticalisme)를 옹호하거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정복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학적 도구로 활용된 바 있었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폐기하고 평화적이고 자발적인 주권의 양보를 통한 범유럽주의의 실현을 구체화시킨 사람은 로카르노조약(1925)과 브리앙-켈로그조약(1928)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사회주의자 아리스티드 브리앙(Aristide Briand)이었다. 1929년 브리앙은, 국제연맹의 후원 하에 유럽연방(Confederation Européenne)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⁴⁰ 한편, 브리앙의 범유럽주의

⁴⁰ Jean-Baptiste Duroselle, *L'ide d'Europe dans l'Histoire* (Paris: Denol, 1965), pp. 272-281. 브리앙의 범유럽주의적 사상과 활동에 관해서는 조르주 수

를 대중적인 운동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은 리처드 쿠덴호프-칼레르기(Richard Coudenhove-Kalergi)백작이었다. 일본 출신의 어머니와 비엔나 명문가 출신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던 쿠덴호프-칼레르기는 ‘범유럽회의’(Congrs Paneuropen)를 조직하였다. 그는 범유럽주의를 히틀러의 유럽 제패 구상과 동일시하고 있던 미국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유럽계 미국인들의 지원을 받아내고자 대서양 너머에 있는 미국을 방문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다.⁴¹

유럽과 미국을 이어주었던 것은 대서양주의였는데, 대서양주의와 범유럽주의는 보완과 갈등의 관계에 있다. 범유럽주의의 부흥, 그리고 유럽의 통합을 부추겼던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제국적 중심을 통합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았던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유럽이라는 또 하나의 통합적 중심을 인정하였고, 통합된 유럽을 대서양적 표준에 다시 통합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통합유럽의 아버지 장 모네가 갈파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역사상 최초로 분할을 통한 지배가 아니라 갈라져 있던 민족들의 통합을 통해 거대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미국은 결코 유럽이 제3의 힘으로 존재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 통합유럽이 유럽좌파에 의해 주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미합중국적 표준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의 유럽합중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적 표준 내에서의 유럽 통합이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지배를 위한 통합’이었다.⁴²

아레즈(Georges Suarez)의 5권의 저서들 중, 특히 Georges Suarez, *Briand: Sa vie-son oeuvre avec son journal et de nombreux documents inedits, Vol. 5: L'Artisan de la paix, 1918-1932* (Paris: Plon, 1939)를 참조할 것.

⁴¹ Richard Coudenhove-Kalergi, *J'ai choisi l'Europe* (Paris: Plon, 1952), p. 264.

⁴² Geir Lundestad, “Empire,” Geir Lundestad ed., *Integrati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Integration, 1945-19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4; Myongsob Kim, “Integrer pour Regner: La strategie globale de l’administration Truman et l’origine de la regionalisation tripolaire,” These pour le Doctorat, Universite de Paris I-Pantheon Sorbonne (1996); Myongsob Kim,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유산으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크로드와 십자군전쟁, 그리고 대서양 방면으로의 팽창과정을 통한 타자성의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유럽중심주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라는 새로운 제국의 등장은 유럽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자 재탄생의 계기였다. 냉전시대 유럽공동체를 통한 유럽의 재탄생은 르네상스에 비견될 수 있는 인류사의 새로운 실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미국의 후원과 소련의 위협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유럽은 미국과 소련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도전을 활용하여 내부의 독일문제를 관리하는 틀을 만들어냈다. 유럽공동체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타자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것은 유럽공동체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이다.

Aborted Pacific Pact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paper prepared for the 50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the Cold War to the Making of a New World Order*, 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14-15 July 2000).

2. 프로젝트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과 노력은 단지 협의적 차원의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교육과 직업훈련, 청소년 교류 등 매우 광의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전개되었다.⁴³ 특히 유럽 공동의 역사적·문화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유럽 시민으로서의 기본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 이해와 교류를 활성화하여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각종 제도과 정책들도 함께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정치·경제적 통합의 부수적 산물로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보다 주도적인 위치에서 다른 부문과 영역들의 통합을 선도하고 봉합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가. 문화영역 (Culture)

당초 유럽공동체 형성의 주요 목표는 정치·경제적 통합이었으나, 그 실질적인 통합과정이 진행되면서부터 문화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기 시작하였다.⁴⁴ 물론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 문화와 관련된 주제들이 전혀 낮은 대상은 아니었으나,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트(Maastricht)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사실상 유럽 공동의 문화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약한 것이었다. 마스트리트 조약은 모두 3개 조항에서 문화정책을 언급하고 있는데, 제3조에는 “회원국의 문화를 꽃피우는데 기여하기 위해 … (to contribute to the flowering of the cultures of the member states)”라고 기술되어 있

⁴³ Anthony D. Smith,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Peter Gowan and Perry Anderson eds., *The Question of Europe* (London: Verson, 1997); 이종원, 『EU론』 (서울: 해남, 1998), ch. 6.

⁴⁴ 유럽연합(EU) 국가간 문화적 협력의 역사에 관해서는 J. Robert Weds and Robert Ladrech, *Europe since 1945: A Concise History* (London: St. Martin, 1996), ch. 15를 참고할 것.

으며, 조약의 제151조에는 ‘문화 2000’(Culture 2000), ‘유럽문화도시’(ECC: European City of Culture), ‘유럽 문화의 달 활동’(European Cultural Month Actions) 등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들을 집행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제87조 3-d항에는 유럽공동체의 경쟁과 공정교역에 관한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회원국들이 문화 및 문화유적 보존에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자에게 원조를 지원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문화 사업자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회원국들이 반드시 공동의 조율된 정책을 취하도록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문화사업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①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지식의 증진과 전파, ② 유럽적 중요성을 갖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와 보존, ③ 비(非) 상업적 문화 교류, ④ 예술 및 문화적 창작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문화 협력은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비회원국,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문화교류 행위자들이 비회원국들과 전개하는 국제적 문화사업들도 공동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⁴⁵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 분야 협력사업의 실례를 “문화 2000”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 관련 프로그램인 “라파엘”(Raphael), “칼레이도스코프”(Kaleidoscope), “아리안”(Ariane) 프로그램 등을 계승·발전시켜 통합한 것으로서 문화적 대화 촉진, 역사적 지식 축적, 유럽문화의 창조 및 전파, 예술가들과 작품들의 교류 촉진, 유럽적 문화 유적의 발굴 및 보존, 새로운 문화적 표현방식의 창조, 그리고 문화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더불어 예술가, 문화사업자, 문화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을 모색하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⁴⁶

“문화 2000”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이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

⁴⁵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7.htm> (검색일: 2004.8.31).

⁴⁶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6.htm> (검색일: 2004.8.31).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부터, 이와 병행하여 문화의 개념이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대량생산문화(mass-produced culture), 그리고 일상문화(everyday culture)를 포함한다는데 회원국들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문화가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예컨대 유럽통합, 세계화, 정보사회화, 고용과 사회통합 등의 과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 마스트리트 조약의 체결 이후 유럽연합은 경제 분야 및 통화 분야의 통합 이외에도 유럽사회(European Society)와 유럽시민(European Citizen)이라는 개념을 도출해야 했으며, 따라서 예술 분야의 “칼레이도스코프,” 문학 분야에서 “아리안,” 그리고 문화유산 분야의 “라파엘” 등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실상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사회 분야에서 문화활동이 문화산업, 고용 촉진 등을 위해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것임을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활성화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계획된 “문화 2000” 프로그램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유럽공동체 내의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회원국 내의 예술인들, 문화사업자, 그리고 문화기관들이 유럽인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들을 협조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계획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문화가 경제적 역할, 사회통합의 역할, 시민의식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크게 세 가지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담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혁신적이고 실험적 활동들로서 최소 3개국이 협력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 표현방식, 문화적 접근방식의 개선을 시도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특히 청소년층과 소외계층들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사회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다. 두 번째는 구조화되고 다년간에 걸친 문화협력을 통한 통합 활동으로서 최소한 5개국 이상이 참가하여 최장

3년간에 걸쳐 문화사업을 전개하는데, 문화 영역을 확장하거나 다양한 문화 부문을 통합하기 위한 시도가 엿보인다. 세 번째는 특별 문화행사로서 유럽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동질감을 줄 수 있는 대단위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1억6천7백만 유로(Euro)의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이 중 최고 45%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활동에, 최소 35%는 통합 활동에, 10%는 특별 문화행사에, 그리고 나머지 10%는 기타 운영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다.⁴⁷

나. 교육영역 (Education)⁴⁸

유럽연합이 결성된 이후 경제적 통합과 정치적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 유럽’(Knowledge of Europe)의 창달에 있어서 고등교육 등 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리스본(Lisbon)에서 열린 유럽 협의회(European Council)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유럽을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로 만듦에 있어서 유럽의 대학들이 중심적이고 전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이 공유되었다. 지식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새로운 지식의 생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전달,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통한 전파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할 때 가능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모든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대학들은 미국의 대학들에 비하여,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열등한 상황에 머물러 있었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는 약 3,30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그리고 유럽 전체로는 약 4,000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들은 약 1,250만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 중 34%의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학들은 미국에 비해 조금 더 많

⁴⁷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6.htm> (검색일: 2004.8.31).

⁴⁸ 유럽연합 국가들 사이 교육부문 협력의 진화과정에 관해서는 Martin McLean, “Education,” Max-Stephan Schultze ed., *Western Europe: Economic and Social Change Since 1945* (London: Longman, 1999)을 참조할 것.

은 졸업생들을 과학과 기술분야에서 배출하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 적은 수의 연구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유럽에서, 특히 민간분야에서 연구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덜 창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본의 66%, 미국의 83% 연구원들이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비해 유럽은 50%에 머물고 있다.⁴⁹

현재 유럽의 대학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 산학간의 효과적이고 긴밀한 협조, 지식 생산 장소의 확산, 지식의 재조직화(즉, 전문화 및 첨단화에 대비), 새로운 지식분야의 등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의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즉, 첫째로 유럽의 대학들이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둘째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능력을 제고하며, 셋째로 유럽의 대학들을 해외에 개방하여 많은 역외 인재들을 흡수해야 한다는 것이다.⁵⁰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교육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교육정보 네트워크”(ERUDYCE: Education Information Network) 사업은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제안으로서 이미 1976년에 결의된 바 있지만, 1980년에 들어서 비로소 “교육정보 네트워크”라는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정보 네트워크” 사업의 목적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개별 국가 및 공동체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시스템의 다양성과 공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교육정보 네트워크” 사업은 개별국가 단위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브뤼셀에 소재한 본부에서 처리하고 분석하여 ‘EURYBASE’의 형태로 저장하고, 참가국들의 교육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지표들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매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⁵¹

⁴⁹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7.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7.htm) (검색일: 2004.8.31).

⁵⁰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7.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7.htm) (검색일: 2004.8.31).

⁵¹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1.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1.htm) (검색일: 2004.8.31).

둘째, “소크라테스”(Socrates) 사업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국민들이 외국어 습득을 유도하고,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며, 그리고 유럽 차원의 협력을 제고하여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지식 유럽의 창달을 촉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소크라테스” 사업은 ① 평생교육의 촉진 및 지식 유럽의 발전, ② 모든 수준의 교육에 있어서 유럽적 특성을 강화, ③ 외국어 구사능력의 제고, ④ 교육 분야에서 협력 및 이동의 촉진, ⑤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적용, ⑥ 교육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의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 사업은 각 연령 및 교육 수준별로 하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① Comenius: 학교교육(유아원, 초등 및 중등교육), ② Erasmus: 고등, 대학, 대학원 교육, ③ Grundtvig: 성인교육, ④ Lingua: 언어중심교육, ⑤ Minerva: 교육에 있어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용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⁵²

셋째, “템퍼스”(Tempus) 사업은 대학교육의 초 유럽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강의계획서(syllabus)의 개발 및 개선, 고등교육기관의 개혁, 자격증 중심의 교육을 통한 산학협동 제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템퍼스” 사업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어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⁵³

넷째, “에라스무스”(Erasmus mundus) 사업은 유럽 이외 제3국가들의 고등교육기관들과 협력을 제고하여 유럽 고등교육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3국가 학생들로 하여금 유럽에서 교육의 기회를 찾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세기 유럽학생들의 교류가 중세시대만도 못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⁵⁴ 이를 위하여 “에라스무스” 사업은 전 세

⁵²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43.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43.htm) (검색일: 2004.8.31).

⁵³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0c.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0c.htm) (검색일: 2004.8.31).

⁵⁴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서울: 푸른길, 1999), p. 201.

계의 자질 있는 인재들이 유럽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럽연합과 제3국들 사이의 보다 제도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유럽의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럽적 부가가치를 겸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에라스무스” 사업은 별도의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하며, 제3세계 교육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기술지원을 확장하는데 노력하고 있다.⁵⁵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재학중 학업의 일부를 외국 기관에서 보낼 수 있는데 유럽의 학생들이 주로 선호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다섯 번째로 유럽 공동의 고등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유럽대학연구소(EUI: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와 로버트 셔먼 센터(Robert Schuman Center)가 운영되고 있다. 유럽대학연구소는 1976년 11월 70명의 학생과 연구생으로 개교하였으며, 점차 규모를 확장하여 왔다. 유럽 공동의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48년에 시작되었으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좌절을 겪었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주도로 회원국들이 기금에 제공하여 프로렌스(Florence)에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과정만을 중심으로 한 개교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럽연합연구소는 당초 계획과 달리 유럽연합의 정규적인 조직은 아니었지만,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대학연구소의 조직구조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위원회(High Council)를 비롯하여 총장(President),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 학술위원회(Academic Council),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개발(Economic Department), 역사 및 문명사(History and Civilization), 법학(Law), 정치학(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유럽법(Euroepan Law) 등의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⁵⁶

유럽대학연구소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기관은 로버트 셔먼 센터(Robert

⁵⁵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72.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72.htm) (검색일: 2004.8.31).

⁵⁶ [Http://www.iue.it/RSCAS.About](http://www.iue.it/RSCAS.About) (검색일: 2004.8.17).

Schuman Center for Advanced Studies)이다. 본 기관은 유럽통합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92년 유럽대학연구소 내에 창설되었으며, 각 학과의 교수들이 상임연구원들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셔먼 센터는 “유럽이란 무엇인가?” “현재 유럽에 대한 정치·사회·경제적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호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서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가?” “세계 안정을 위하여 유럽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 등의 주제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⁵⁷

또한 실험적 차원에서 유럽연합은 9개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지에 위치한 이들 실험학교는 11개국의 언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어 중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턴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며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7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1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유럽 바칼로레아’라는 학위가 수여된다.⁵⁸

다.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유럽공동체 조약의 제150조는 “유럽연합이 회원국들의 직업교육 체제 및 방식에 있어서 독자성을 갖도록 존중하면서도 회원국들이 공동의 직업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리스본(Lisbon)에서 열린 유럽협의회(European Council)에서는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사회로 만든다는 전략적 목표를 확인한 바 있으며, 직업교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2002년 바르셀로나(Barcelona)에서 열린 유럽협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2010년까지 유럽의 교육 및 직업훈련을 세계적 모범 사례로 만들 것임을 천명하

⁵⁷ [Http://www.iue.it/RSCAS.About](http://www.iue.it/RSCAS.About) (검색일: 2004.8.17).

⁵⁸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p. 203.

고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즉, 2000년 1월 이후 해외에서 획득된 직업기술들이 유럽 공동의 “유로패스 트레이닝”(Europass Training)에 기록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2002년 3월부터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통의 이력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이력서는 비정규·정규 학습(non-formal or informal learning)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력서와는 구분되었다.⁵⁹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a Vinci) 사업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한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교육 협력을 도모하여 유럽적 교육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업은 ① 고용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무위주의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이 초기 직업교육에서 적응력과 기술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직업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신 기술에 대한 평생교육 지속적인 직업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며, ③ 교육 수혜자들이 경쟁력과 기업가적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⁶⁰

이에 따라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업은 대학을 포함한 훈련기관, 연구기관, 일반기업, 통상기관(상공회의소 포함), 지방조직, 비영리조직 등 관련된 모든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직업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이 노동시장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에 쉽게 접근하고 현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은 ① 유럽 내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이들이 활발하게 국가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② 직업교육에 있어서 질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가간 협력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③ 직업교육 차원에서 언어 및 문화를 교육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④ 직업교육을 통해 얻어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을 위한 협력

⁵⁹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00003c.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00003c.htm) (검색일: 2004.8.31).

⁶⁰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5.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5.htm) (검색일: 2004.8.31).

을 지원하며, ⑤ 자료 축적 및 공동체 차원의 표준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⑥ 타 지역공동체와의 공동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⁶¹

그밖에도 유럽연합은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1986년부터 1989년 사이, 그리고 1990년부터 1994년 사이 유럽연합은 기술관련 직업교육을 위해 대학 및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코멧”(Commett) 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⁶² 1988년부터 1993년,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여성들에게 어떤 형태의 직업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적절한 전략과 방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리스”(Iris) 사업을 운영하였다.⁶³ 또한 1988년부터 1991년, 1992년부터 1994년 사이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규 직업교육 이수 이후 1~2년 동안 추가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페트라”(Petra) 사업을 운영하였으며,⁶⁴ 직업교육에 있어서 신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역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유로텍넷”(Eurotecnet) 사업을 운영하여 기술의 변화가 고용, 일, 기술 자격 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참작하여 직업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기도 하였다.⁶⁵ 그리고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평생교육 개념을 도입하여 각 회원국들의 정책과 활동을 개발하는 “포스”(Force)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⁶⁶

라. 청소년 교류 (Youth)

미래의 유럽공동체 시민을 양성한다는 취지 아래 유럽연합은 청소년활

⁶¹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5.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5.htm) (검색일: 2004.8.31).

⁶²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5.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5.htm) (검색일: 2004.8.31).

⁶³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8.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8.htm) (검색일: 2004.8.31).

⁶⁴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2.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2.htm) (검색일: 2004.8.31).

⁶⁵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7.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7.htm) (검색일: 2004.8.31).

⁶⁶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6.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6.htm) (검색일: 2004.8.31).

동 지원 프로그램(Youth Action Program 2000~2006)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럽 학생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비정규 분야의 교육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적 교육 분야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유럽연합이 “지식 유럽”(Europe of Knowledge)의 창달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던 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for Europe,” “European Voluntary Service,” 역내 회원국간 그리고 역외 비회원국과의 교류를 총괄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활동 지원 프로그램은 ①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② 다국간 교류에 참여함으로써 젊은이들이 통합된 유럽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③ 청소년들이 유럽공동체의 생활에 적응하고 보다 책임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돕고, ④ 유럽적 상황에서 획득될 수 있는 비정규적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⑤ 인종차별, 외국인 차별 그리고 인권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적극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⑥ 청소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⁶⁷

이에 따라 청소년 교류사업은 18~25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모국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서 최장 12개월 동안 비영리 무보수의 자원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European Voluntary Service,” 15~25세에 해당하는 젊은이들이 그룹단위로 교류하는 것을 지원하는 “Youth for Europe,” 청소년들에 의해 진행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Initiative for Youth,” 지식 정책분야에서 다른 지역 공동체와 공동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는 “Joint Actions,” 기타 협력, 교육, 정보에 관한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7년간에 걸친 사업을 위해 5억2천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책정하고, 다양한 청소년 교류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⁶⁸

⁶⁷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s19003.htm> (검색일: 2004.8.31).

이상에서 살펴본 프로젝트로서의 유럽문화공동체는 유산으로서의 유럽 문화공동체에 기반을 두면서도 단순히 유산의 총량을 따지고 그것에 의존하기보다 유산의 활용에 착목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창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활하고 있는 유럽중심주의, 유럽우월주의는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의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과정에서 과거 유럽의 치부에 대한 합의된 침묵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⁶⁸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603.htm> (검색일: 2004.8.31).

IV

동북아문화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1.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탈냉전 이후 세계체제의 재편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3대 중심축의 하나를 구성하면서 지정학, 지경학, 지리문화적(geo-cultural)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⁶⁹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중심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등은 저마다 동북아 공동체 구성의 중요성과 그 실질적 이익을 인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군사·안보적 불신과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상호 인식의 부족 등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사실상 동북아 지역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은 역사적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자신들 나름대로의 상호 다른 인식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근대 일본의 경험 속에서 동북아 지역은 ‘탈중국’(脫中國)을 위한 ‘서구화’(西歐化)와 ‘대동아’(大東亞)라는 포괄적 범주 속에서 개념화되었으며, 중국은 ‘중화주의’(中華主義)라는 전통적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동북아를 동아시아 범주에 포함시켜 왔다.⁷⁰ 중국적 표준화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한국 또한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는 자구(自救)와 생존의 논리로서 ‘사대’(事大)와 ‘선린’(善隣)이 근대화의 격동기를 헤쳐 나가는 전통적 지역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처럼 동북아의 주요 국가들은 과거 역사적 근원과 중국적 표준화에 따른 그들의 인식체계를 통하여 하나의 지역 범주를 엮어낼 수 있지만, 그 내용과 실상은 서로 판이하게 달라 동북아 공동체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그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동북아의 지역 범주는 이들 국가들의 과거 인식과는 또 다른 지역적 연대의식과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것이며, 과거 역사적 유산에 기인하는 자문화 중심적 사고나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이해와 협력을 통해 지역적 연대를 형성하고 평화와

⁶⁹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서울: 아르케, 2004), p. 125.

⁷⁰ 김동택, “문명을 위한 문명들, 그리고 동아시아 및 유교문명의 선택과 세계질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8호 (2002), p. 147.

공존의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기약하자는 건설적 미래상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동북아 지역질서와 국가간 이해관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상호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호혜와 평등에 기반을 둔 동북아적 표준을 수립하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보다 나은 ‘동북아시아’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동북아 공동체의 이상이다.

가. 중국의 인식

역사와 문화적 인식의 관점에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화주의’로 무장된 국가이며, ‘동북아’라는 지역 개념보다 확장된 개념인 ‘동아시아’를 그들의 지역 범주로 인식하여 왔다. 실질적으로 과거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 국가로 군림하였던 중국은 자신들을 중심의 대국(大國)으로, 다른 주변 민족과 국가들을 이민족(夷民族)의 주변국(周邊國)으로 간주하여 자문화 중심적 전통의 자긍심을 널리 고취시켜 왔다. 역사적 변천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지역 맹주로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을 조공국가로 거느렸던 중국은 명(明)의 붕괴와 원(元), 청(淸)으로 이어지는 이민족의 지배, 그리고 서구 열강에 의한 문호개방에 직면하여 한족(漢族)의 자긍심에 상처를 받기까지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20세기 초 급격하게 전개된 서구 열강의 침입과 일본의 발흥은 중국인들로 하여금 민족주의적 정체성과 국가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은 동아시아라는 지역 범주로부터 자신들을 방위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 범주를 확립할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주창하며 조선(朝鮮)을 합병하고 만주(滿洲) 지역으로 진출하게 되자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동아협력체와 대아시아주의를 약소민족을 짓밟기 위한 제국주의이자 중국병탄주의(中國併呑主義)라고 비판하고, 인도주의와 세계주의

에 입각한 신아시아주의를 주장하였다.⁷¹ 즉,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항하여 이주(亞洲)의 전 인민이 연합하여 연대조직을 만들고 아시아인의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그것이다.⁷² 일본의 만주 진출과 중일전쟁의 귀결로 이미 이 시기부터 일본의 위협에 대한 중국인들의 배일(排日) 의식은 깊숙하게 각인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후 국제적으로 이념 경쟁이 가속화된 냉전체제가 형성되면서 보다 공고화될 수밖에 없었다.⁷³

1950년대부터 본격화된 냉전체제의 도래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역적 편제 속에 귀속되는 대전환을 초래하였다.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중일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민족주의가 고취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중국의 내부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승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 이념과 결합된 새로운 세계관과 지역적 연대 의식을 가져오게 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하는 자유주의 해양세력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륙세력의 대결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1960~70년대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대립관계를 양산하였다. 중국은 과거 서구 열강과 일제 침략기 때 축소되었던 방어적 지역 범주에서 벗어나 다시금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역 개념을 갖게 되었으며, 체제의 내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다시금 동북아의 중심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국제체제에서 냉전구조가 사라진 이후 중국은 지역 강대국으로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며, 새로운

⁷¹ 신아시아주의와 대아시아주의의 논쟁에 관해서는 리따자오(李大釗), “신아시아주의,”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pp. 160-165; 쑨원(孫文), “대아시아주의,”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pp. 166-178 등을 참조할 것.

⁷²李大釗, 『李大釗文集』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4).

⁷³ 왕징웨이(汪精衛), “중일전쟁과 아시아주의,”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pp. 179-189.

세계질서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안보와 경제문제에 우선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⁷⁴ 우선 군사·안보 부문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주시하면서 미일동맹이나 미국의 일방주의 외교를 견제하는 외교적 노력을 견주하고 있다.⁷⁵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이미 개혁·개방을 통하여 경제적 급성장을 이룩하면서 국제 수준으로의 개혁과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도모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도 주도권을 행사하여 중국경제의 역내 중심적 역할을 제고시키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일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잡하기 위하여 동아시아라는 포괄적 지역개념 아래 동남아 화교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대(對)아세안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 확고한 지역적 패권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1990년대 이래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 왕래와 문화교류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양적인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근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태동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경쟁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절충안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문화 부문에 있어서 공동체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지역을 한자 문화권으로 확장하거나 상호 문화교류를 통하여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식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들은 국가간 장벽이나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획은 아니었다.⁷⁶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문화적 교류

⁷⁴ 박재훈,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527-528.

⁷⁵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國際戰略安全形勢評估』(北京: 時事出版社, 2003), pp. 59-60.

⁷⁶ 張琢, “現代化在東亞的地域推進,” 羅榮渠 編, 『東亞現代化: 新模式與新經驗』

와 협력은 외양적 확대와 내부적 정체라는 엇박자로 진행되고 있으며, 진정으로 역사적 사안을 해결하고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현실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⁷

오히려 근래 들어 중국에서는 ‘동북공정’(東北工程)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 정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의한 고구려사 왜곡이나 동북 3성에 대한 역사적 재인식은 중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여 지역·계층간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고 체제 전환의 내부적 갈등요인을 미연에 차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북공정’은 소위 동북 지역을 재건하자는 ‘진흥동북’(振興東北)을 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과거 선도적 공업지역으로서의 명성이 무색할 정도로 개혁·개방과정에서 소외된 이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부활하자는 경제적 목적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들은 국내적 문제의 국제적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경제적 협력과 공동체 구성을 지향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기대와 희망을 거스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 일본의 인식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전통적인 해양세력으로서 대륙을 지향하며, 특히 동북아 지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왔다. 과거 역사 속에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속국으로 인식되었던 일본은 서구 열강의 요구에 의해 개항을 단행한 이후 그들의 발달된 문물을 습득하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기본 인식을 빠르게 전환시켜 나갔다. 특히 메이지(明治) 시대에 있어서 일본 지식인들의 세계관은 ‘선택된 탈아론’(選擇された脱亞論)에 입각하여 한국과 중국 등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pp. 57-58.

⁷⁷ 쑨꺼(孫歌),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서울: 창비, 2003), pp. 109-110.

인근 국가들과 거리를 두고 근대화와 민족주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⁷⁸ 이른바 ‘서구화’를 통하여 중국이나 한국의 변방 혹은 주변국 개념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서 자주적 민족주의의 기틀을 다지고, 나아가 동북아를 대표하는 지역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현실화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상 인식론적 차원에서 일본의 지역적 한계인 동북아를 벗어나 선택된 민족으로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아시아를 제패한다는 ‘선택된 탈아론’의 기본 논리는 곧 일본의 지역적 범주가 동북아로부터 크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동북아에 한정되었던 지역적 조망을 넓혀 국제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의 일원이면서도 ‘탈아입구’(脫亞入歐)를 주장하는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지향점은 비동시적인 것을 동시에 성취해야 하는 일본 근대화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였다.⁷⁹ 식민지배 시기에 발달된 서구 문물의 유입은 일본을 빠른 시간 내에 근대적 기틀을 갖춘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외형적 발전은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와 연계되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팽창주의적 지역 개념을 파생시키기에 이르렀다.

근대화과정 속에서 동북아를 바라보는 일본의 관점은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 논의나 동아연맹론(東亞聯盟論)에 바탕을 둔 ‘대동아공영권’의 주장을 통해 주요 논지를 이해할 수 있다. 19세기 말 급격한 근대화과정에 힘입어 20세기 초부터 조선 합병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일본의 동북아 진출은 1937년 만주 침공에 뒤이어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동북아의 지역 범주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의 연대를 통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기약한다”는 ‘대동아공영권’의 주장은 식민지배 시기의 민족주의와 군국주의가 결합된 제국주의적 침략의 기본 논리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부터 일본은 이미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⁷⁸ 加藤政洋, “グローバル化と地理學の想像力,” 『思想』九三三號 (2002), pp. 94-107.

⁷⁹ 김기봉, “동아시아 담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2001), p. 21.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성장하여 역내 식민지 진출을 합리화하였으며, 1941년부터 본격적으로 동남아 진출을 시도하여 1945년 패전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대부분을 점령하는 제국주의의 위용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5년 패전 이후 연합군에 대해 항복을 선언한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 기조의 또 다른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전범국으로서 연합국을 대표한 미군의 군정을 경험한 일본은 195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냉전구조에 힘입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변신하게 되었으며, 1950~60년대 전후 복구와 빠른 경제성장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안보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냉전 체제라는 대립적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해양세력의 일원으로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는 아시아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 태평양전쟁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포섭하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억제하는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냉전 기간동안 미국에 의한 안전보장을 담보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은 탈냉전 이후에도 해양 민주주의세력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도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은 군사·안보 중심의 논리로부터 경제 중심의 논리로 전환된 국제체제의 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국가론(平和國家論)과 보통국가론(普通國家論) 사이의 논쟁을 통해 가시화되었다.⁸⁰ 사실상 이러한 논쟁은 근래 들어 지적되고 있는 일본 정계의 우경화(右傾化) 바람이나 자위대(自衛隊)의 증강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는데,⁸¹ 과거 전쟁의 책임을 지고 군사·안보 부문에 있어서 자주성을 상실하였던 일본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동아시아 지

⁸⁰ 평화국가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船橋洋一, 『日本の對外構想: 冷戦後のビジョンを書く』(東京: 岩波新書, 1993); 五十嵐武士,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歴史的な文脈と未來の構想』(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9) 등을 참조하고, 보통국가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北岡伸一, 『普通の國へ』(東京: 中央公論新社, 2000)을 참조할 것.

⁸¹ 宮地正人, 『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東京: 三川出版社, 1987), pp. 383-390.

역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군사·안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적 시점에서 중국이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통하여 ‘대륙아시아’를 지향한다면, 일본은 ‘해양아시아’를 지향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해양은 지금까지 대륙에 소속되어 대륙을 잇는 수단으로만 이해되어 왔지만, 일본은 해양을 포함하는 이미지, 나아가 해양에 근거한 아시아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⁸² 이에 따라 일본은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중국의 팽창과 군사·안보적 영향력 증강을 주시하고 있으며, 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해외 파병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경제 부문에 있어서 일본은 이미 동북아를 넘어선 동아시아 개념을 확대·재생산하여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투자와 경제협력력을 주도함으로써 자신의 대외적 영향력과 국내 적응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⁸³ 물론 이러한 영향력 확산은 경제적 예측화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대동아공영권’을 획책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환동해경제권’의 구상,⁸⁴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의 확대 등 다양한 논의들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경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반면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아시아적이기 보다는 서구의 그것을 닮아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것은 이미 일본의 근대화과정으로부터 시작된 ‘탈아입구’의 전통적 개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45년 패전 이후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여 급격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시아적 가치관과 전통보다는 서구의 자유주의 가치관과 자본주의 이념을 널리 습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⁸²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 “세계화 속의 동아시아 지역문화: ‘근대국가’에서 동아시아 지역세계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9호 (2002), pp. 188-191.

⁸³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서울: 아연출판부, 2003), p. 107.

⁸⁴ 일본의 동해경제권연구회는 한반도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연해주, 몽고, 중국의 동북 3성을 포함하는 ‘환동해경제권’을 구상한 바 있다. 이광규, 『동북아시아대 한민족이 연다』 (서울: 백산서당, 2002), p. 61.

불구하고 일본은 과거의 전통적 가치관과 고유의 관습을 계승·발전시켜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적 유산으로 발전시켰으며, 경제성장과 더불어 일본 문화의 보급 및 해외 진출을 통하여 자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3개국 중 비교적 개방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사회·문화적 교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은 곧 아시아 속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일본인이라는 인식의 지평을 확대시키는데 이바지하였다.

다. 한국의 인식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을 돌이켜 볼 때 동북아 3개국 중 ‘동북아’라는 지역 개념과 범주에 가장 충실했던 국가는 한국이다. 굳이 ‘사대주의’(事大主義)나 ‘선린외교’(善隣外交) 등 대외관계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과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지역 강국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들 국가들과의 우호와 협력을 강조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동북아 지역의 대국으로 존재하였던 중국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자주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가의 영위와 안전을 존속시켜 왔으며, 동해와 남해를 사이에 둔 일본의 잦은 외침 또한 국민적 단합과 저항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화유산 속에서 동북아를 포획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한국의 지역적 인식은 다른 국가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미약한 수준이었다. 물론 과거 역사 속에서 북방의 중국을 개척하고 남방의 일본을 정벌하고자 하는 계획과 실천들이 없었던 바는 아니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언제나 단기적인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표출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지각변동은 우리의 근대화과정에도 수많은 영향을 미쳤다. 비교적 뒤늦게 근대화과정에 편입된 한국의 입장에서 지역 강국이었던 중국의 몰락과 서구 열강의 개방 요구, 그리고 신흥 일본의 부상은 동북아 지역을 벗어나 국제사회로의 새

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민족적 단결과 개혁을 통한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국가발전을 추진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각적 주체의식에 뿌리를 내린 자기혁신으로서 반봉건적 진보와 자기방어로서의 반침략적 개혁운동이 추진되기도 하였다.⁸⁵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근대국가가 채 정비되지도 않은 가운데 한일합방이라는 일제 36년의 뼈아픈 경험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한민족(韓民族)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철저히 말살하려는 일본의 식민지배 정책에 맞서 끈질긴 항일독립운동과 국권회복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이미 국권을 상실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에 편입된 굴욕적 지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근대사는 국가와 민족 독립을 위한 항일 투쟁사로 점철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민족주의에 근간을 둔 새로운 사고와 지역적 인식이 형성되었다.⁸⁶

1945년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을 맞이한 한국은 동북아 지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진 극한적 대립 속에서 한국은 1950년 민족상잔의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진 채 한 민족이 두 개의 체제와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된 분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한은 남한대로 한미동맹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해양세력에 편재되었으며, 북한은 북한대로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대륙세력에 편재되었다. 국제사회의 냉전구조는 한반도에서도 여실히 표출되어 이념적 갈등과 대립을 통한 남북한 사이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대립 양상은 국제체제의 조류가 변화함에 따라 잦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 한반도 상황은 남북한의 주도적 입장에 따라 개선되기 보다는 국제체제를 움직이는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1980년대 말부터 촉진된 국제사회의 냉전구조 해체는 한국의 외교

⁸⁵ 한홍수, 『근대한국민족주의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p. 193.

⁸⁶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글방, 1978), p. 98.

정책 노선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였다. 이른바 북방외교로부터 표출된 한국의 동북아 재인식은 중국, 러시아와의 국교 수립과 더불어 새로운 북방 진출을 꾀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은 과거 전통적인 동북아 인식으로부터 보다 확장된 개념인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꾀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에 의하여 ‘아세안 + 3’ 구상과 대(對)아세안 외교정책이 강화되었으며, 1997년 경제위기에 뒤이어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살려 하나로 아우르는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 1998년에는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에 의하여 다양한 실무적 논의들이 전개되었으며,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East Asian Study Group)이 작성한 2002년 보고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위한 노력에 한국 또한 일조를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동북아 지역의 2대 강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밀접한 경제협력체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논의도 등장하였다.⁸⁷ 이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고려와 지정학적 위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국가발전과 지역협력을 주도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다시금 동북아 지역 개념이 강화되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과 동북아 물류중심지론 등을 기반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론의 실천적 추진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⁸⁸ 이것은 한국이

⁸⁷ 이상우,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박광희 엮음,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화 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p. 771.

⁸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은 한국이 물리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유럽의 네덜란드와 비슷한 역할을 하자는 것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같은 지역협력체의 구성에 있어서 유럽의 벨기에와 같이 물류, 금융, 관광,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총무·간사 혹은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해 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통해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한국 위상의 저하를 방어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균형발전에 핵심국가로 발전하자는 구상이다. 송희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37-38.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열어간다는 것이며,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을 통해 국가발전을 꾀하지는 보다 적극적인 지역 개념이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참여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동북아시아’를 주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명칭을 동북아시아추진위원회로 바꾸어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⁸⁹

2.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통합은 흔히 ‘연성 지역주의’(soft regionalism)로 특징지어진다.⁹⁰ 그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공동체 형성이 현실적으로 많은 실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형성의 실질적인 추진과정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더디고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그

⁸⁹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 아래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의 주도적 구축은 물론 대외협력 강화 및 내부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① 평화 촉진을 위한 동북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② 동북아 공동체 형성 촉진, ③ 물류 허브 기능 강화, ④ 동북아 금융 허브 추진, ⑤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 ⑥ 전략적 외국인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pp. 10-14; [Http://www.nabh.go.kr/warp/app/home/kr_home](http://www.nabh.go.kr/warp/app/home/kr_home) (검색일: 2004. 6. 11.).

⁹⁰ Tsuneo Akah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Regional Order in NEA,” Kap-Young Jeong and Jaewoo Choo eds., *Towards New Dimensions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8), p. 49; T. J. Pempel, “The Soft Ties of Asian Regio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held by the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December 11, 2002), pp. 107-129.

기능과 정체성 차원에서는 아직도 공동체 구성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아세안 국가들과 동북아 강국들 사이의 기능적 연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아시아적 가치와 공동체 인식이라는 지역적 연계성과 정체성도 용인된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⁹¹ 이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시아연합(Asian Union)의 결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함에 있어서 보다 중·단기적 실천과제로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시키고 있으나, 동북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협력이나 공동체 구성 또한 넘어야 할 수많은 장애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²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동북아 지역화와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첫째,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는 아직도 군사·안보적 불신과 경쟁이 팽배하여 정치적 요인이 지역협력과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⁹³ 과거 냉전시기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한반도 분단을 필두로 가시화되면서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역내 안보질서의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일본·미국을 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북

⁹¹ Simom Tay, "ASEAN Plus 3: Challenges and Cautions about a New Regionalism," Mohamed Jawhar Hassan, Stephen Leong and Vincent Lim eds., *Asia Pacific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21st Century* (Kuala Lumpur: ISIS Malaysia, 2002), p. 104; Paul Evans, "East Asian Regionalism: Supplement or Alternative to an American-Centered Pacific 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held by the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December 11, 2002), pp. 135-136.

⁹² 이수훈, "동북아시아대론," 한국동북아시아학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139.

⁹³ Fu-Kuo Liu, "East Asian Regionalism: Theoretical Perspectives," Fu-Kuo Liu and Philippe Régnier eds., *Regionalism in East Asia: Paradigm Shifting?* (London: RoutledgeCurzon, 2003), p. 3; Tsutomu Kikuchi, "Regionalism and Region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Fu-Kuo Liu and Philippe Régnier eds., *Regionalism in East Asia: Paradigm Shifting?* (London: RoutledgeCurzon, 2003), pp. 103-104.

한·중국·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세력 사이의 대립은 대륙과 해양 사이의 이념적 갈등은 물론 군사·안보 관계에 있어서도 첨예한 대립을 양산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는 19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냉전구조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 교류와 ‘동북아시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동북아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중일관계는 과거 미중관계의 역동적 변화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아 왔으며,⁹⁴ 탈냉전 이후에도 첨예한 견제와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1970년대부터 가시화된 미중관계의 개선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안보구조에 있어서도 점진적인 변화를 유발하여 과거 냉전시기보다 조금은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탈냉전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군사·안보질서의 재편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지역 강대국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일 안보관계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전략적 구도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적 유산에 기인하는 상호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⁹⁵ 이에 따라 현재 양국 사이에는 디아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섬) 영유권 분쟁으로부터 양안(兩岸)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미·일 안보동맹 문제, 중국의 핵정책, 일본의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 참여 문제 등 다양한 시안들이 안보적 신뢰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일본 자위대의 역할 강화와 이라크 파병 등과 관련하여 중국은 일본에 의한 잠재적 위협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중국의 군비현대화와 경제적 부상에 대응하여 중국을 경계하기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⁹⁶

⁹⁴ 田中明彦, 『日中關係 1945~1990』(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1).

⁹⁵ 이태환, 『중일 안보관계의 변화』(성남: 세종연구소, 2003), p. 29.

⁹⁶ 陳潔華, 『21世紀 中國外交戰略』(北京: 時事出版社, 2001), pp. 195-196.

동북아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주요 변수는 한반도 문제이다.⁹⁷ 특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개발 문제로부터 표출된 1990년대 남북한 사이의 긴장관계는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 강국들의 안보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록 2000년 6월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발표, 남북한과 동북아 주변 강국들이 참여하는 ‘6자회담’ 개최 등 일련의 상황들은 동북아 안보의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호전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포기되지 않는 한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주변 국가들 사이에도 안보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남북한 문제는 동북아 주변 강국들의 입장과 실리에 따라 교차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역내 국가들 사이의 안보적 신뢰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⁹⁸

프로젝트로서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요인은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경쟁관계와 입장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전통적 군사·안보 개념으로부터 경제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지경학의 새로운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 사이의 교역과 경제협력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경제통합이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⁹⁹ 물론 동북아 3개국 사이에서 경제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져서 일본

⁹⁷ 백종천, “한반도 주변 4강과 북한: 동북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구도,” 백종천·진창수 엮음, 『21세기 동북아 평화 증진과 북한』 (성남: 세종연구소, 2000), pp. 17-53.

⁹⁸ 이동운,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동북아 주변 4강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2000), p. 197.

⁹⁹ 역내 무역의존도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은 1990년대 들어 이미 북미 지역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력 집중도 역시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다. 1985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36%에서 1990년

의 기술과 자본력, 중국의 자원과 성장잠재력, 그리고 한국이 축적한 개발 경험 등이 합쳐진다면, 성장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경제적 실익은 분명히 존재한다.¹⁰⁰ 그러나 국가간 경제발전의 격차 등 경제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들이 경제협력과 통합을 가로막고 있으며, 이러한 제약요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완화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못한 형편이다.¹⁰¹

우선 동북아 경제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아직도 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 중국의 경제체제와 철저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닌 한국·일본이 아직도 경제교류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통합 이전 단계에서 한·중·일 3개국 사이의 시장 자유화와 제도적 조화 및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지대와 같은 지역통합을 형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¹⁰² 물론 유엔개발계획(UNDP)의 후원으로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이나 북경·서울·도쿄(BESETO) 등 3개국 지방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협력 방안, 그리고 중국의 요녕성(遼寧省)과 산둥성(山東省), 한국의 동해안과 서해안 개발지

44%, 1994년 50%를 넘게 되었으며, 반면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의 경우 1990년 38%, 1994년 43%를 기록하였다.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pp. 76-77.

¹⁰⁰ Wendy Dobson, "East Asian Integration: Synergies Between Firm Strategies and Government Policies," Wendy Dobson and Chia Siow Yue eds.,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Ottawa, Canad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and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7), pp. 11-14; Tsuneo Akaha, "Economic Cooperation in NEA: A Global Perspective," Kap-Young Jeong, Ku-Hyun Jung and Jaewoo Choo eds., *Dynamic Transi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7), pp. 19-23.

¹⁰¹ 한홍렬, "동북아 FTA 전망과 평가,"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181-182.

¹⁰² 권용혁,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사회와 철학 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서울: 이학사, 2003), p. 9.

역, 일본의 큐슈(九州)와 산구(山口)를 연계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환
황해경제권 등 동북아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활동과 성과는 아직도 미약한 형편이다.¹⁰³

이와 더불어 중국의 경제력 부상에 따른 각국간 미묘한 입장 차이와 경
쟁도 무시할 수 없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
요인이 존재하는 동북아의 경제협력보다는 ‘아세안 + 3’ 논의를 중심으로
현실화의 가능성이 큰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¹⁰⁴ 중국은 아세안과 지난 2002년 11월 ‘아세안 + 3’ 정상회담에서 자
유무역지대(FTA)의 단계적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담은 협정
을 체결하였으며, 2004년부터 아세안 국가들의 상품 중 600개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폐지하는 등 이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또한 싱가포르와 경제동반자협
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한 이래 아세안 국
가들 전체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실
무적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중국과 일본은 동북
아 3개국을 중심으로 한 상호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보다 아세안 국가
들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은 한·
중·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경제공동체 형성을 보다 어렵게 만
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프로젝트로서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또 다른 장애요인
은 탈냉전 이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한

¹⁰³ 박광주,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세종연구소 엮음, 『아시아와 세계
화: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성남: 세종연구소, 1998), pp. 118-119.

¹⁰⁴ Hadi Soesatro, “Asia-Japan Co-operation Toward East Asian Inte-
gration,” *Ryokichi Hirono e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3), pp. 24-49.

층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동북아 지역협력의 애로사항은 주요 국가간 경제적 불균형과 발전의 격차 등 물리적 요인들도 존재하지만, 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국가 중심적 민족주의 의식 또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 사이에는 국가주의적 정책 기조가 현저한 가운데 과거 역사와 근대화과정에서 지배와 피지배, 침략과 저항 등에 의한 집단적 반감 의식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¹⁰⁵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화해와 협력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밖에도 디아오위다오 분쟁이나 독도 문제, 그리고 근래 들어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등도 이들 국가들 사이의 민족주의 감정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상호 불신과 대립을 유발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족국가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북아 지역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가 확산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교류와 협력이 깊어질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대한 경계심리도 함께 발동되는 역사와 문화적 인식의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북아 공동체를 국가간 위계구조를 인정하고 단순한 기능적 통합으로 풀어나가려는 시도는 자칫 상당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은 과거 역사적 경험에서 한 번도 평등한 역사를 가져 본 적이 없으며, 반대로 늘 위계적인 구조를 지녀 왔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체를 추진하려는 프로젝트 자체가 역내 국가들 사이의 반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지역은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현재까지도 정치적 맥락에서 논쟁과 대립을 야기시키고 있는 침략과 지배, 피지배의 경험이 민족주의 감정 속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주장한 바 있는 동북아

¹⁰⁵ 조성환, “동아시아주의의 정치사상: 근대와 탈근대의 주변,”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215.

경제중심국가론 또한 그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시아주의라는 또 다른 형태의 중심주의(centralism)로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역적 중심주의나 배타적 지역주의로 발전되어서도 곤란하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¹⁰⁶

넷째,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지역적 개념과 범주, 그리고 과거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기인하는 인식론적 차이 또한 동북아 공동체 실현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의 행동반경을 동북아라는 지역구도 안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급격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미국과의 세계적 표준 경쟁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이미 세계를 넘보고 있는 중국은 그들 자신을 동북아의 일원으로 보기보다는 동북아를 중국의 일부로 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선의의 아시아연대론이 서구 우월주의에 반사된 아시아 연대론으로 왜곡되면서 일본 중심의 ‘대동아공영권’을 위한 이념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던 과거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근대화 이후 일본은 이미 동북아의 지역 범주를 뛰어넘어 동아시아 혹은 ‘서구화’를 통한 세계화의 지역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중국이 잡에서 깬 용으로서 동북아를 뛰어넘어 세계화를 포효하고 있다면, 일본 또한 일찍이 ‘탈아입구’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한층 다가서 있는 형편이다.

실질적으로 한국과 달리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한다. 중국은 화교들을 대상으로 동남아 국가들과 경제 블록화를 서두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남부 운남성을 기점으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메콩강 확대계획을 구상하여 이 곳을 하나의 경제권과 문화권으로 엮으려는 구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 또한 패전 이후 경제를 회복하자마자 바로 동남아를 자신들의 시장권으로 간주하여 경제 진출을 도모하고 교역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수백 개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 국가들의 경제를

¹⁰⁶ 이수훈, “동북아시아대론,” p. 65.

좌우하고 있다.¹⁰⁷ 중국과 일본이라는 아시아의 두 강대국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압력이 서서히 증대되고 있는 것을 실감한 아세안 국가들 또한 이들 두 세력 사이에서 어떤 외교정책에 의해 지역안보와 국가의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수천 년을 살아오며 갖은 시련을 겪으며 오늘날까지 발전한 한국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들은 한국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상대적 무관심에 대해 의아해하는 점도 없지 않다.¹⁰⁸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은 자칫 주변 국가들의 동아시아 개념보다 협소한 자기중심적 논의로 비쳐질 수 있으며, 중국이나 일본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기 쉽다. 특히 한국이 주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이나 ‘동북아 물류중심’은 정치적으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지나치게 많은 정치·경제적 자산이 투자됨으로써 중국과 일본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사실상 우리가 주장하는 동북아 지역 개념은 우리의 상대로서 중국과 일본을 포함해야 하며, 이들 국가들과는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일본이 국가적으로 동북아 지역 개념보다 확대된 동아시아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또한 대외적으로 동북아를 표방하되 동남아 지역과의 상호 협력도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¹⁰⁹ 결국 우리가 동남아까지 시야를 넓히고자 하는 것은 단지 중국이나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인도, 이슬람까지 시야를 넓히기 위한 준비작업이며,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외부적 변화와 내부적 필요성에 기인하여 보다 확장된 지역 개념과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체계적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¹⁰⁷ 이광규, 『동북아시아 한민족이 연다』, p. 67.

¹⁰⁸ 이홍구, “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중앙일보』, 2004년 6월 14일.

¹⁰⁹ 이수훈, “동북아시아대론,” pp. 70-71.

2003년 한국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여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적 담론으로서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은 2004년에 들어서 ‘동북아시아대론’에 자리를 양보하였다. 동북아의 협력(partnership)과 협치(governance)를 포괄하는 동북아시아대론은 기존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과는 달리 경제 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적 영역별로 분절적이거나 순차적인 접근이 아닌 동시적이고 총체적이며 압축적인 지역 만들기(region-building)를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상상(想像)을 뛰어넘어 지역에 대한 상상을 의미하며, 인위적인 구획이나 통합이 아닌 동의와 합의를 통한 자연스러운 결합을 의미한다.¹¹⁰ 이러한 ‘지역 만들기’란 각 개인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선택의 깔때기”들 중 하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상의 공동체를 현실의 공동체로 만들어어나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 있어서 한 개인은 그 탄생과 더불어 여러 층위의 표준에 둘러 싸여 있었다. 이것은 유럽연합을 지탱하고 있는 보충성(subsidiarity) 원리의 연원이다. 우선 가족적 표준이 있었고, 자신이 속해 있던 장원의 표준이 있었으며, 기독교 세계(Christendom)의 표준이 있었다. 가족적 표준을 대표하는 존재가 가부장이었다면, 장원적 표준은 봉건 영주에 의해, 기독교 세계의 표준은 교황에 의해 각각 대표된다. 중세 유럽이 근대 유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주권은 일개인을 둘러싼 동심원적 표준구조의 외원(外圓)수축동학(shrinking dynamics of outer circle)과 내원(內圓)팽창동학(expanding dynamics of inner circle)의 상호 길항관계 속에서 탄생하였다. 외원수축동학이란 교황적 표준이 관철되던 공간(sacerdotium)의 수축에 관한 것이었으며, 내원팽창동학이란 봉건영주적 표준이 관철되었던 공간(regnum)의 팽창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대론 동북아적 표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

¹¹⁰ 앤더슨은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는 근대 민족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더불어 인위적으로 형성된 상상의 공동체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러한 상상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새롭게 구분되고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ch. 1-3.

하는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한다. 질서란 일정한 표준을 중심으로 하여 관념적(ideational), 물질적(materialistic), 제도적(institutional) 차원들에 존재하는 특정한 종류의 패턴이며, 이러한 패턴을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들의 나선형적 동학을 통해 다시 표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국제정치에서 관념(ideation)은 국내정치만큼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할 지라도 결코 국제 권력구조의 잔여물은 아니다.

동북아시대론은 공동체적 역사 인식과 세계관을 강조하는 인문학적 토대와 연결성을 강조한다. 인식론적으로 주관주의(중심국가론)와 숙명주의(주변국가론) 사이의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따라잡기(catch-up)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문명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번영의 모델을 창조하고자 하는 탈근대적 기획의 성격을 지닌다. 동북아시대론은 동북아 중심국가론과 달리 ‘중심주의’적 담론이 내놓을 수 있는 폐해와 오해를 불식하고, 관련국가와 동북아민(民)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중심과 변방의 이분법적 구획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삼국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문명적 네트워크의 그물코 국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변강사’(邊疆史) 제조 프로젝트인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맞서는 길이기도 하며, 일본 중심의 동북아 재편을 추구하는 ‘대동아론’(大東亞論)을 극복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동북아시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동체로서의 동북아가 아닌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동북아가 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 중심론이 대륙과 해양의 충돌, 조우, 공존, 혼용의 공간으로서 중국과 일본을 대자적 개념으로 놓고 있다면, 동북아시대론의 대자적 개념은 세계화시대인 동시에 닫힌 민족국가의 시대 또는 유럽 중심적 근대, 대서양 양안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과도기(이라크 안정화 이후 대서양연대가 다시 회복되기 전)로서 이러한 시기는 오히려 동북아 공동체 추진의 호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동북아시대론은 ‘유산으로서의 동북아’가 아니라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를 지향한다. 유산으로서의 동북아에서는 문화유산의 총량이 중요하지만,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에서는 유산의 활용이 보다 중요하다. 냉전시대 동북아의 핵심어가 분할(divide)과 봉쇄(containment)였다면 동북아시대의 핵심어는 통합(integration)이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단절이 아니며, 역사의 창조적 계승을 의미한다. 과거 동북아의 또 다른 핵심어가 서구화(Westernization)였다면, 현재 동북아시대의 핵심어는 정상화(Normalization)이다. 이것은 한미관계의 정상화, 한중관계의 정상화, 한일관계의 정상화, 중일관계의 정상화,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정상화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동북아시대론은 다음과 같은 국내의 지적 흐름들을 반영하는 큰 호수(big lake)의 성격을 지닌다. 첫째, 1980년 광주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대립구도 속에서 국가 너머(beyond nation)로까지 인식론적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생겨났고, 일국적 시각과 세계체제적 시각의 매개항으로 '동북아적 시각'이 제시되었다. 둘째,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문명론이나 역사적 방법론, 지정학적 방법론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막대한 인력과 자원을 끌어들이던 소련학(Sovietology)이 지역학 분야에서 누리고 있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면서 대신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연구(East Asian Studies)가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되었다. 셋째,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1960년대 이후 "주변부로부터의 오솔길"이나 "따라잡기(catch-up)" 논쟁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옳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아울러 유교자본주의론이 대두되었고, 1992년 아시아 역내무역량이 아시아와 북미간 교역 규모를 추월하였다. 넷째, 지역적 블록화의 추세가 강화되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전 세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화 내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움직임 속에서 홀로 처져 있는 한국의 자구책이라는 차원에서 한국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다섯째, 포스트 모더니즘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무비판적으로 진행되어 온 서양 일변도의 근대화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근대적 서양에 대한 대립항으로서 동(북)아시아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여섯째, 1990년대 소련, 그리고 러시아의 몰락과 대비되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이러한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미래의 역할을 인접 국가들과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시도로서의 동(북)아시아론이 대두되었다. 일곱째,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체제적 접근의 관점에서 동북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체제 수준의 냉전구조 해체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온존하고 있는 남북한 분단체제에 대한 우회적 해결 노력으로서 ‘동서독 + 유럽’의 모델을 ‘남북한 + 동아시아’에 적용시켜 보려는 노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확대된 동북아 담론은 공간적 복합성, 시간적 복합성, 이념적 복합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전근대적 시간을 가진 동북아,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근대적 시간을 가진 동북아, 세계화의 흐름 안에서 탈근대적 시간을 가진 동북아, 세계화의 흐름 바깥에서 전근대적 시간을 가진 동북아, 세계화의 흐름 바깥에서 근대적 시간을 가진 동북아, 세계화의 흐름 바깥에서 탈근대적 시간을 가진 동북아 등에 관한 담론들이 동북아 담론이라는 틀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하는 지역적 연대성뿐만 아니라 상호 연계 작용을 통한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역내 국가들 사이의 민족주의가 여전히 국가나 사회집단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성격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세게 밀려오는 세계화의 충격 속에서도 동북아 국가들은 동북아라는 동일 지역의 정체성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개별 국가들마다 각기 다른 양식의 반응을 표출하여 왔다. 이에 따라 군사·안보적 불신이나 정치체제의 차이, 국가별 경제적 격차를 지닌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국가간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과 프로젝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즉, 동북아 협력 체제는 단순히 군사·안보 부문이나 경제·무역 부문의 협력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교육, 역사, 예술,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 재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¹ 또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순차적·분절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동시적·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² 이것은 동북아 공동체가 정계나 재계, 학계의 논의에서 벗어나 각국 국민들, 즉 ‘보통사람들’의 일상에서 현실화되어야 하며, 특히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와 접근방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³ 사실상 동북아 지역은 하나의 지역 범주로서 갖추어야 될 지역적 정체성이 미약하며, 근대화과정에서 정치·경제적으로 이질성이 높아 이러한 이질성과 다양성이 지역공동체 형성과 통합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요 3개국은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근·현대사의 인식구조에서 여전히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 사이의 폐쇄적 민족주의는 공동체 형성의 단합과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

사실상 과거 역사적 경로와 유산을 살펴보면,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이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북아를 구성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긴밀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표준화

¹¹¹ 박세일,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국가·시장·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시아학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33.

¹¹² Liu, “East Asian Regionalism,” p. 19.

¹¹³ 정현숙,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북아 가족론,” p. 315.

속에서 그 동질성을 확대·발전시켜 왔다.¹¹⁴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은 여전히 상당 부분 유사한 전통문화를 갖추고 있으며, 근대화의 발전과정 이전까지 동북아 지역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온 바 있다. 비록 현재의 동북아 국가들은 지역적 정체성과 연대감이 유동적이고 부정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다시 활발해진다면 동북아 공동의 실익에 대한 지역적 연대감이나 지역적 정체성 또한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근래 들어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나 비정부기구, 민간 부문 사이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류, 즉 국가간 상호작용은 지역적 가치관 혹은 지역적 연대감에 대한 자의식을 촉발시켜 공동의 정체성을 성장시키고, 궁극적으로 공동체 구성과 발전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공동체의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특수성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보편적 맥락에서 끊임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민족이나 국가 기획을 넘어서 지역을 단위로 한 인식의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공문화할 필요가 있다.¹¹⁵ 동북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은 ‘문화적 정체성’이라는 아교로 접착될 때 보다 공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동북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문화라는 강력한 지향점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화적 동질성과 정서적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평화와 공동 번영의 가치를 현실로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문화적 정체성은 역내 주민들 사이의 상호소통과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국가나 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세될 때 보다 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¹¹⁴ 최봉영,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과 근대화,”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1호 (1998), p. 27.

¹¹⁵ 이희옥,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347.

역설적으로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에 있어서도 공동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외국기관이나 정부들에게 억울하게 협박당하거나 역경에 처해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이미지가 자신들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¹¹⁶ 이러한 공동의 위기의식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과 중국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단행하도록 만들었으며, 이후에도 지역공동체 구성을 위한 공동의 논의와 협력을 가능케 만들었다. 이른바 두만강 개발계획이나 북경·서울·도쿄를 연결하는 베세토(BESETO) 경제협력, 환황해경제권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아세안 + 3’에 기반을 둔 동아시아 경제협력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경제협력 차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고한 협력의 기본 바탕을 만들기 위하여 문화적 교류와 협력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른바 ‘아시아적 정체성’의 모색이야말로 경제 부문의 협력은 물론 기타 영역에서 보다 친밀한 유대관계와 유기적 결합을 공고화시키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유사성과 동질성을 넓혀 나가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를 코드로 해서 과거 제국주의 문제를 해명하고 세계화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을 하나로 묶는 코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문화이며, 이것은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지니고 있는 한자, 유교, 불교(종교)의 문화적 유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¹¹⁷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

¹¹⁶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황 및 전망: 정치학적 시각,” 한국동북아 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263.

¹¹⁷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들은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대부분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으며, 결국 한자 문화권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논의도 있다. 이광규, 『동북아시아 한민족이 연다』, p. 24;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문화를 한자 문화권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유교 혹은 도교 공동체로 보든지 간에 그 기저에는 문화에 대한 공통적 인식이 담겨져 있다.¹¹⁸ 굳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 논쟁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동아시아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바로 동북아라는 지역적 개념에 기인하는 문화로부터 나타나고 있다.¹¹⁹

물론 동북아 지역을 유교 문명권 혹은 한자 문화권으로 단순화하여 파악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¹²⁰ 비록 동북아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유교 혹은 한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대화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문화들이 이질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은 서구 열강과 초기 접합과정에서 다분히 분화적이고 다원적인 속성을 보여 주었으며, 그 결과 동북아 국가들은 현재의 문화 구조에서 각기 다른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¹²¹ 결국 동북아 국가들이 과거 역사의 굴곡과 문화적 변질을 뛰어넘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공동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정학적 개념을 뛰어넘어 지리문화적(geo-cultural) 정체성을 되찾는 노력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¹²² 설혹 과거 동북아의 근대사와 문화유산이 점령과 굴종,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점철되어 서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할지라도, 미래에는 상호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접변과 연결 코드가 형성되어야 한다.

2002), p. 22.

¹¹⁸ 김기봉, “동아시아 담론,” p. 31.

¹¹⁹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보다 자세한 논의는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전통과 현대 엮음,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pp. 183-242;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전통과 현대 엮음,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pp. 313-336을 참조할 것.

¹²⁰ 백영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20세기 한·중·일의 인식,”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p. 13.

¹²¹ 진덕규, “글로벌리즘과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반응양식,”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2001), p. 46.

¹²² 김기봉, “동아시아 담론,” p. 33.

마지막으로 동북아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은 군사·안보적 접근방법이나 경제적 접근방법보다 한국에게 있어서도 많은 강점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이 양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흔히 동북아 지역공동체에 관한 인식론적 논의는 중국 중심의 대륙 지향적 관점과 일본 중심의 해양 지향적 관점이 충돌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한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대륙과 일본의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hub) 거점 혹은 네트워크의 논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³ 인적 자원의 차원에서도 한국은 동북아 국가들과 하나의 문화권을 이루고 경제적 호혜성을 유지하며 전략적 동반자가 된다고 할 때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2백만 명, 일본에 1백만 명 등 동북아 공동체 역내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고른 해외동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외동포는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동남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나마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서 해외동포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¹²⁴ 결과적으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해외동포를 활용하여 보다 다각적인 문화 교류와 확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한국이 중심이 된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유도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동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 문화의 해외 진출과 중재자적 역할의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흥미로운 흐름이다.¹²⁵ 대중문화의 역내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문화를 하나로 엮어가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¹²⁶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¹²³ 전영평·박경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pp. 24-25; 최원식,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로서의 동아시아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 16.

¹²⁴ 이광규, 『동북아시아대 한민족이 연다』, p. 83.

¹²⁵ 박제훈,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p. 542.

¹²⁶ 이광규, 『동북아시아대 한민족이 연다』, p. 76;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p. 150.

한류 열풍은 우리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대중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한류 열풍을 단순한 문화적 흐름의 한 가지 현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동북아 지역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문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은 일본 문화의 유입에 대하여 단계적 개방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중국 대륙에 대한 한류의 역풍으로 한국에서의 화풍(華風)이 불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유입과 확산은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당연한 결과라고 하겠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 접변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접목하여 동북아적 문화로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주역이자 산실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문화적 접근방법을 강화하는데 있어 한국이 지닐 수 있는 또 다른 강점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다.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한국은 역내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지리적·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문화교류나 협력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한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이기도 하다.¹²⁷ 특히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인터넷의 활용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중국을 능가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강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¹²⁸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가 국경의 장벽 없이 자유롭게 교환되고 확산될 수 있는 무형의 공간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공동체의 인터넷 교류를 활성화

¹²⁷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pp. 125-127;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p. 137.

¹²⁸ Sankaran Ramanathan, "Internet in Asia: An Overview," Sankaran Ramamathan and Jörg Becker eds., *Internet in Asia* (Singapore: Asi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2001), pp. 11-32.

화시키고 한국이 이러한 정보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되려는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¹²⁹ 그 실현 가능성 또한 높게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교류 사업을 개발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과 지역적 정체성을 우리의 것으로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행히 현재 한국이 진행 중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정책사업들 중에는 문화교류를 확충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사업들이 상정되어 있다.¹³⁰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지나치게 정부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텐츠가 부족한 형편이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정부나 민간만이 주도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문화교류와 연대사업은 오히려 정부와 민간 부문이 각자의 수준에서 적절하게 조화된 전략을 갖고 동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은 지나치게 경제 부문만이 강조되어 자칫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을 유발함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국가와 시민사회,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들과의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충함은 물론 한국의 장점을 살려 보다 광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교류와 연대사업에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¹²⁹ 김철수·서창수, 『E-동북아 중심지 구축 성공전략』 (서울: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¹³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 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pp. 29-30.

V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과 동북아의 비교와 교훈

1. 유럽과 동북아의 비교

오늘날 문화는 단순히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가치관, 사유체계 등을 규정하는 협의적 개념과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매개하는 유·무형의 광의적 개념으로서 국가간 협력이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간 통합이나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은 부차적인 접근방법이 아니라 필수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논의들은 이미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 구성과 통합과정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와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와 관련된 양 지역간 경험적 비교는 앞으로 동북아 공동체가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 역사와 문화가 종교와 장원, 민족국가의 형성 등 내적 교류작용과 국가간 경쟁, 십자군전쟁 등 외적 타자성의 인식을 통하여 서서히 공통의 문화와 표준을 형성해 나갈 무렵, 동북아는 중국 중심의 정치·문화적 질서와 편제 속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느슨한 상호 작용과 교류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근대화과정 속에서 유럽 국가들은 상호 교류와 대외 진출, 그리고 식민지 침략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하나의 중심적 사고와 공동운명체로서의 인식을 자각하게 되었으나,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약화되는 중국의 영향력과 외세 침입에 기인하여 보다 탈중국적이며 독자적인 지역 편제와 민족국가 만들기에 치중하여 왔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는 서로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형성하였던 반면, 동북아의 역사와 문화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중심이 되어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치열한 도전과 대립이 존재하여 왔다. 역사와 문화유산으로서의 동북아 공동체가 유럽의 그것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이것은 결국 보다 분산적이

며 파편화된 동북아 지역질서와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V-1> 유럽과 동북아의 문화공동체 비교

	유럽	동북아
유산으로서의 문화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한 상호 교류와 경쟁, 긴밀한 연대성 확립 • 근대화과정의 공유: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경쟁과 협력 • 중심부와 주변부의 구심력 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중심의 편제와 느슨한 연대성 확립 • 근대화과정의 분산: 문화적 탈중국화를 통한 도전과 대립 • 중심부와 주변부의 원심력 작용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치통합의 가시화와 함께 문화통합을 위한 노력 병행 • 과거 문화유산의 현실적 계승과 통합적 발전 추진 • 프로젝트 추진의 체계적·통합적 운영 노력 • 문화·교육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천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정치통합의 부진과 문화통합을 위한 노력 미진 • 과거 문화유산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의 한계성 노정 • 프로젝트 추진의 갈등과 이견, 분산적 노력 • 문화·교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동의 논의 미약

사실상 과거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유산에 입각하여 보다 공고한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 공동체의 현황과 새로운 단계적 접근과 협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북아 공동체 사이에는 많은 이질적 차이점과 지역·국가에 따른 특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흔히 유럽의 신화와 역사적 전통, 문화유산 등은 견제와 균형 속에서 경쟁과 협력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럽을 포괄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며, 근대화과정 속에서 빈번한 교류와 협력의 경험은 유럽적 정체성을 인식케 하여 오늘날 유럽통합의 디딤돌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반면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은 과거 역사 속에서 지역적 대국인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와 문화적 변이를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탈중심적 저항과 이탈을 형성케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적 문화와 유산은 결과적으로 서구 열강과의 접변과 근대화과정 속에서 탈중국적 사고의 흐름에 기초하여 근대민족국가의 수립을 향한 흐름을 창출해냈다. 이런 의미에서 과거 유산으로서의 동북아는 중국 중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며,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향한 노력이 자칫 중국 중심적 문화질서의 복구처럼 비추어질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동북아 문화유산의 총량에 있어서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유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동북아문화공동체는 프로젝트로서의 문화공동체로서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의 통합과정 또한 유럽과 동북아 사이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당초 유럽의 지역통합 역시 그 출발과정에서는 경제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통합과정이 진행되었으나, 점진적으로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유럽적 연대감과 정체성을 형성하여 항구적인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문화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은 단순히 기능적 통합이나 구조적 결합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합의 안정성을 이룩하기 위해 유럽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공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추진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유럽통합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후속 세대들에 대한 공동체 교육을 실시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반면 동북아의 경우 아직 공동체 형성의 초기과정에서 통합의 정치·경제적 실익을 강조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문화공동체 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실행이 빈약한 실정이다. 유럽의 공동체 형성과정이 정치·경제적 통합 노력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동북아 공동체의 논의에서는 아직도 정치·경제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단순히 협의적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만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이러한 차이점은 유럽과 동북아가 경험한 과거의 역사·문화와 지정학적 상황이 차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상호 경쟁과 교류를 통해 공통의 역사를 공유하여 온 유럽의 역사와 압도적 우위에 있던 중국을 중심으로 위계적 질서를 유지하였던 동북아의 역사는 서로 상이한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호 동

질성과 연대감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 또한 각 지역과 국가들마다 서로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역사적 궤적과 문화적 유산과 틀을 벗어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동북아 국가들의 근대화과정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이것은 현대사의 진행과정에서도 국가간 협력과 통합보다는 갈등과 대립관계를 양산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공동체 형성은 유럽의 그것과 비교하여 시공간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공동체가 갖는 과거 유산과 프로젝트로서의 당위성이 유럽 공동체의 그것과 비교하여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유럽의 동질성과 정체성이 강화되고 공동체 구성과 통합의 길이 앞당겨졌다면,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도 과거 분산화된 역사와 문화유산을 뛰어 넘는 동북아 공동의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다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유럽의 공동체 형성과정이 정치·경제 등 기능적 통합으로부터 보다 영구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로서의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공동체 구성을 위한 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재의 단계에서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협력과 통합이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에 기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훈

유럽의 공동체 형성과 통합과정에 대한 비교·고찰은 우리에게 동북아 시대를 구성하는 중층적 구조들 중에서 문화적 측면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다른 층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문명공동체의 발전을 지향할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동북아 공동체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첫째, 동북아적 표준설정을 위한 문화적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시계열적 접근 대신 중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한 협력을 통해 동북아 협력으로, 다시 동아시아 협력으로, 그리고 아시아연합(AU)으로”의 단계적 발전을 지향하는 시계열적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동시적이고 중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시계열적 접근을 지양하고 중층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것은 또한 남북한 문화공동체의 발전을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참여적 동북아문화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폭발하는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에너지로 순환시키는 역할을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 내부적 역동성과 국제적 역동성의 접합을 의미한다. 즉, 내부적 역동성을 통해 참여정부의 탄생이 가능했던 것과 같은 차원에서 “참여적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을 최대한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주어진(given) 표준에만 맞추지 않고,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데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관주의와 숙명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주관주의와 체념적 숙명주의는 모두 위험하다. IMF 사태를 통해 드러났듯이 탈냉전 세계는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배려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시민의식을 성장케 하였다. 이것은 국가보다 시민사회가 우선해야 한다는 ‘역(逆) 1.5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정교한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식과의 병존은 미흡하다. 시민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무사증(Intra Visa)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유럽의 생겐 조약과 유사한 형태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민(民)의 참여를 위해 바람직하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럽 통합운동과정에서 사회적 마이너리티였던 유대인들이 많은 기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밖의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수준에서 국가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시민적 자발성에 기초한 코리안 네트워크가 동북아의 뼈대적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유럽의 교훈은 국가전략의 수립과 수행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국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역량을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관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다(유럽연합: 정치-주권, 경제-공동이익, 사회-연대, 문화-다양성 추구). 참여정부 등장의 연장선상에서 당분간 시민적 참여를 강조하는 ‘참여의 동북아’를 위해 ‘역 1.5 전략’(국가부문보다 민간부문 강조)을 추구하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역체제의 건설주체인 국가와 시민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참여와 관련하여 ‘역 1.5 전략’을 적용할 경우, 북한의 참여는 오히려 불가능하다. 극우적 혹은 아나키적 시민단체의 활동이 오히려 동북아문화공동체의 수립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재설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1980년대부터 형성된 국가-시민사회론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사회=선, 국가=악이라는 도식은 부적합하고 불필요하다. 돌이켜보면 CNP 논쟁에서 몰락했던 CDR노선이 오히려 시민사회론으로 부활했지만, 이제는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국가론(제국적 평화 대 국제적 평화)이 필요하다.¹³¹

이것은 동북아문화공동체를 추진함에 있어서 스파게티 모델(시민사회주체론)과 샐러드 모델(국가주체론)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동북아문화공동체 수립에 있어서 민족국가는 지역협력의 장애요인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근대적 민족국가의 창조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집단적 적대감, 그리고 미완의 주권, 국민, 영토의 문제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유럽통합의 경험에 비추어 보다면 민족국가는 지역체제 구축에 있어서 지양(aufheben)의 대상이기는 했어도 맹목적 안티(anti)의 대상은 아니었

¹³¹ 김명섭, “제국적 평화 대 국제적 평화,” 『비평』통권 12호 (2004), pp. 254-277.

다. 동북아 공동체라는 화두는 사실 국가주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세계질서를 단일한 판으로 보지 말고, 탈근대적 국제질서가 주도하고 있는 신중세적 권역(neo-medieval sphere), 근대적 국제질서가 주도하고 있는 근대적 권역(modern sphere), 전근대적 질서가 강하게 온존하고 있는 혼돈권역(chaos sphere) 등 3개의 거대한 판으로 이루어진 판구조론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의 경우, 국가주권의 임종조건(death conditions)이 아직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은 스파게티 모델의 지역적 협력과 더불어 샬러드 모델의 지역적 협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파게티 그릇모델이라는 거미집 모델(Cobweb Model)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와 시장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실뭉치처럼 얽혀지면서 새로운 초국가적 실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샬러드모델이라는 개별국가의 주권이라는 고정체가 존중되는 가운데 국제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정부간 협력이 강화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스파게티 모델과 샬러드 모델이 반드시 대립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럽적 공주(共主)의 사례에서 이미 살펴볼 수 있듯이 단단한 주권들이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가는 샬러드 모델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기업을 연결하는 스파게티 모델이 보다 견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주권완정[主權完整]론).

유럽연합에서 보여진 신자유제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문화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국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북아 문화담당관들의 순환근무제는 동북아문화공동체 수립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지역문화공동체 수립을 통한 세계화 속도의 조절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시민사회에 대해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의 공동체 수립과 추진과정이 동북아 공동체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유럽의 공동체 수립과정에서 무엇을 취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유럽 공동체의 경험을 통하여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을 효과적으로 매개하며 연결할 수 있는 한국의 역할이다. 한국이 지닌 역사와 문화는 유산의 총량 보다 유산의 활용을 강조한 프로젝트를 통해 그 역할을 극대화될 수 있다. 사실상 동북아가 공동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유럽과 다른 점은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너무 대국이 오랫동안 지역 패권을 차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여러 국가들이 중국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예견되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일본의 경우 중국의 군사·안보적 영향력과 경제적 부상을 견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과거사에 기인하여 일본과의 공동체 구성을 주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통합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지역적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이견과 갈등을 베네룩스(BENELUX) 3국이 매개하여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른바 약소국의 연합이 대국들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어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북아 공동체의 수립을 위하여 약소국가들의 연합인 동남아 국가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흔히 ‘아세안 + 3’로 논의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는 중국과 일본을 동북아 공동체 구상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보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아세안 +3’의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을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여 공동체 구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남아 지렛대론’은 지역적 강국 사이에 위치해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이나 중국의 ‘동북 3성’ 수준으로 환원되는 동북아론을 경계하는 동시에 미국이라는 유일제국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을 포획해낼 수 있는 약소국들의 연합이라는 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럽 공동체의 경험을 통하여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문화적 토대에 기초한 ‘동북아시아대’를 창출해 내야 한다는 점이다. 흔히 역내

국가간 통합과정에서 문화 영역은 정치·경제 영역에서 밀려나 부차적인 사안으로 취급되기 쉽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공동체 형성과정에서도 살펴보면 문화공동체는 정치·경제적 공동체 수립과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문화적 연대감과 정체성을 수립하는 문제는 통합과정에서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으며, 통합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적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공유되는 유교문화와 불교문화, 그리고 한자문화에 바탕을 둔 문화공동체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공동체 형성은 단지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고 베트남, 태국 등과 같이 유교적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동남아 국가들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역적 통합의 확산은 물론 동북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연대로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문화공동체는 문화적 동질성의 추구와 더불어 그 현실적 다양성에 대한 학습과정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것은 결국 중국이라는 대국 중심의 문화적 통합이 아닌 국가간 ‘다양성의 통일’을 기하는 방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교육 사업은 지역적 대국이나 강국이 추진할 경우 경계심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오히려 지역적으로 중·소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될 때 보다 큰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치·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한국은 그 책임자이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입장에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류’의 열풍과 더불어 대중문화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대중문화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역내 영화와 대중음악과 같은 문예콘텐츠의 공동개발 및 제작, 유통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국가간 문화산업의 교류와 협력을 제고시키는 것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동체 형성의 주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또한 20세기 동아시아의 대표적 전쟁이었던 한국의 6·25 전쟁, 베트남 독립전쟁, 동티모르 독립전쟁 등 전쟁유산을 히로시마 평화공원 수준의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시민단체와 연계된 국제사업으로서 동북아 평화문화포럼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밖에도 동북아 문화재단과 같이 동북아 국가들의 각종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재단의 설립을 주도한다면, 동북아문화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네 번째로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동북아 공동체의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나는 프랑스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럽인으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동북아의 정체성과 동질적인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각국 역사 교과서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들에게 아시아의 복원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만 한다. 또한 동북아인의 창출에 과도하게 집착하기 보다는 국제이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동북아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속의 동북아,’ ‘일본의 이해,’ ‘중국의 이해,’ ‘동남아 화교공동체에 대한 이해,’ ‘러시아 카레이스끼에 대한 이해,’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여 미래 세대에게 동북아의 지표와 현황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북아 장학재단의 설립을 주도하여 한국 중심의 동북아 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대학으로서 최근 세계 굴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피렌체 소재 유럽연합연구원(EUD)과 같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지도자과정(EAI: East Asian Institute, NEAI: North East Asian Institute)을 설립하여 동북아의 정체성 증진 및 동북아 지식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북아 문화표준을 논의하는 가칭 동북아 고등학술원을 설립하여 서구어의 한자번역어 표준화작업, 서구어의 한자번역어 사전 등의 사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VI

결론

오늘날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들 사이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은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공동체 형성이 역내 국가들에게 가져다주는 정치·경제적 실익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냉전 이후 국가간 군사·안보적 갈등과 경쟁이 희미해진 가운데 하나의 지역을 단위로 한 국가간 사회·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의 결성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 지역적 연대와 공동체 구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타 지역에서도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지역협력과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각 지역이 처해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과 역사·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접근방법이 표출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에 대한 논의는 ‘아세안 + 3’에 입각하여 지역협력의 단위를 동아시아 전체 지역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는 논의로부터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공고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근래 들어 한국을 중심으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공동체 논의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에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시아추진위원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시행되고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지역협력이나 역내 공동체 구성은 유럽연합이나 북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럽의 역사와 문화유산은 비록 서로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은 동질성의 확산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날의 유럽통합을 형성할 수 있었다. 반면 역사적 경로와 문화유산에 기인하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양극은 오늘날 동북아

의 지역협력을 가로 막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역내 강국이 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공동체 형성을 둘러싼 오랜 인식적 차이는 지역협력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사이에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어 협력과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을 보다 공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역공동체 구성에 있어서 유럽과 동북아 지역이 지니는 인식론적 차이는 과거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동질성의 차이만큼이나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를 추진하는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에 기인하여 비교적 동질적인 정체성과 표준을 확립하고 상호 협력적인 공동체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던 것에 반하여, 동북아 국가들은 이러한 노력들이 미약하고 분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통합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적 교류와 협력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으나, 동북아 국가들은 아직도 정치·경제적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미진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역협력과 통합의 원동력을 제공해 줄 지역정체성과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조차 공동으로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유산으로서의 공동체 인식과 프로젝트로서의 공동체 추진이 모두 부실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과거 분절적 역사와 문화유산을 극복하고 현실적으로 공동체 구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방법의 노력들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 사이의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공동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상호 이해의 증진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연합과 같이 포괄적·체계적인 계획이나 거대한 프로그램의 공동 추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공동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동북아 공동체 구성을 위한 문화적 접근방법의 강화는 한국이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한류 열풍 등 한국의 강점을 동원하여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거대한 야심의 발로가 아니라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북아 문화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실천적으로 동북아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성은 하나의 이상적 계획이나 관념적 인식이 아니라 실천적 과제이자 프로젝트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이 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젝트로서의 동북아 공동체 구성은 과거 역사와 문화유산의 인식론적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서 문화적 접근방법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은 유럽의 지역협력과 통합이 주는 한 가지 교훈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기도 하다. 다양한 문화 교류와 공동의 교육·연구 확산, 동북아 공동의 지식 축적이야말로 상호 이해와 인식의 폭을 증대시키고 동북아 공동체 구성의 뼈대를 보다 공고하게 다져나가는 길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원택·조홍식. 『유럽의 부활』. 서울: 푸른길, 1999.
- 김명섭. 『대서양문명사: 팽창, 침탈, 헤게모니』. 서울: 한길사, 2001.
- 김철수·서창수. 『E-동북아 중심지 구축 성공전략』. 서울: 인하대학교 출판부, 2004.
- 남덕우. 『동북아로 눈을 돌리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2.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서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2003.
- 쑨꺼(孫歌).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서울: 창비, 2003.
- 월러스틴, 이매뉴얼. 나중일 외 옮김. 『근대세계체제 I: 자본주의적 농업과 16세기 유럽 세계경제의 기원』. 서울: 까치, 1999.
- 이광규. 『동북아시아 한민족이 연다』. 서울: 백산서당, 2002.
- 이리에 아키라. 이종국·조진구 옮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이수훈.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서울: 아르케, 2004.
- 이종원. 『EU론』. 서울: 해남, 1998.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997.
- 이태환. 『중일 안보관계의 변화』. 성남: 세종연구소, 2003.
- 차기벽.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글방, 1978.
-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서울: 아연출판부, 2003.
- 틸리, 찰스. 이향순 옮김.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 의 발전』.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94.
- 한국문화인류학회 엮음.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 서울: 일조각, 2003.
- 한홍수. 『근대한국민족주의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6.

- 흡스뵈, 에릭. 김동택 옮김. 『제국의 시대』. 서울: 한길사, 1998.
- 李大釗. 『李大釗文集』上.. 北京: 人民出版社, 1984.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所. 『國際戰略安全形勢 評估』. 北京: 時事出版社, 2003.
- 陳潔華. 『21世紀 中國外交戰略』. 北京: 時事出版社, 2001.
- 宮地正人. 『國際政治下の近代日本』. 東京: 三川出版社, 1987.
- 北岡伸一. 『普通の國へ』.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0.
- 船橋洋一. 『日本の對外構想: 冷戰後のビジョンを書く』. 東京: 岩波新書, 1993.
- 五十嵐武士. 『日米關係と東アジア: 歴史的文脈と未來の構想』.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9.
- 田中明彦. 『日中關係 1945~1990』.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91.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
-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Chessboard: American Primacy and Its Strategic Imperatives*. New York: Basic Books, 1997.
- Chaunu, Pierre. *Sville et l'Atlantique (1504-1650)*, Vol. VIII (2 bis): *La conjoncture (1593-1650)*. Paris: S.E.V.P.E.N., 1959.
- Coudenhove-Kalergi, Richard. *J'ai choisi l'Europe*. Paris: Plon, 1952.
- Coulmas, Peter. *Les citoyens du monde: Histoire du cosmopolitisme*. Paris: Albin Michel, 1995.
- Duroselle, Jean-Baptiste. *L'idée d'Europe dans l'Histoire*. Paris: Denol, 1965.
- Gould, Julids and William L. Kolb eds. *Dictionary of Social Science*. New York: Free Press, 1964.
- Kennedy, Paul. *The Rise of the Anglo-German Antagonism 1860-1914*.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Globalization and*

-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The MIT Press, 1999.
- Overy, Richard ed. *Atlas of the 20th Century*. London: Times Books, 1996.
- Parsons, Talcott. *The Social System*. New York: Free Press, 1967.
- Pascal, Blaise. *Pensée*, 1670.
- Przeworski, Adam and Henry Teune. *The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Wiley, 1970.
- Russett, Bruce M. *International Regions and the International System: A Study in Political Ecology*. Chicago: Rand, McNally & Co., 1967.
- Suarez, Georges. *Briand: Sa vie-son oeuvre avec son journal et de nombreux documents indits*, Vol. 5: *L'Artisan de la paix, 1918-1932*. Paris: Plon, 1939.
- te Brake, Wayne. *Shaping History: Ordinary People in European Politics, 1500-170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n Press, 1998.
- Thornton, John. *Africa and Africans in the Making of the Atlantic World, 1400-18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Weds, J. Robert and Robert Ladrech. *Europe since 1945: A Concise History*. London: St. Martin, 1996.
- Wight, Martin. *Systems of State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Power Politic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8.

2. 논문

- 권용혁. “동아시아 공동체의 가능성 모색.” 사회와 철학 연구회 엮음. 『동아시아 사상과 민주주의』. 서울: 이학사, 2003.
- 김기봉. “동아시아 담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국주의로부터 제국주의를 넘어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2001).
- 김동택. “문명을 위한 문명들, 그리고 동아시아 및 유교문명의 선택과 세계 질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8호 (2002).
- 김명섭. “제국정치학과 국제정치학.” 『세계정치연구』 제1권 1호 (2001).
- _____. “지정전략으로서의 동아시아.” 『세계정치연구』 제2권 1호 (2002).
- _____. “프랑스의 문화외교.”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2호 (2003).
- _____. “탈냉전기 국제정치학의 문명패러다임.”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3호 (2003).
- _____. “탈냉전기 세계질서와 국가주권.” 『세계정치』 제25집 1호 (2004).
- _____. “제국적 평화 대 국제적 평화.” 『비평』 통권 12호 (2004).
- 김현일. “시간과 서양문명.” 『역사비평』 봄호 (2000).
- 다나카, 스테판.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외 엮음.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5.
- 딜릭, 아리프. “아시아-태평양권이라는 개념.” 『창작과 비평』 봄호 (1993).
- _____. “역사와 대립되는 문화인가? 동아시아 정체성의 정치학.” 정문길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 리따자오(李大釗). “신아시아주의.”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박광주. “아시아 공동체, 현실인가 신화인가.” 세종연구소 엮음. 『아시아와 세계화: 동아시아 국가의 대응』. 성남: 세종연구소, 1997.
- 박세일. “21세기 동북아시아대의 국가·시장·시민사회: 시민사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시아학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박제훈.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백영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거처: 20세기 한·중·일의 인식.”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백종천. “한반도 주변 4강과 북한: 동북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구도.” 백종천·진창수 엮음. 『21세기 동북아 평화 증진과 북한』. 성남: 세종연구소, 2000.
- 송희연.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쑨원(孫文). “대아시아주의.”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왕징웨이(汪精衛). “중일전쟁과 아시아주의.” 최원석·백영서 엮음. 『동아시아인의 ‘동양’ 인식: 19~20세기』.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
- 이동윤.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통일: 동북아 주변 4강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2000).
- 이상우.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박광희 엮음. 『21세기의 세계질서: 변화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 이수훈. “동북아시아대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이승환.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전통과 현대 엮음.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 이희욱. “동북아 시민사회 교류와 공동체적 지역통합.”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전영평·박경하.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 동북아 상호이익

- 과 갈등 극복을 위한 방안.”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연구』. 서울: 인문사회연구회, 2003.
- 정현숙.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서의 동북아 가족론: 정서적 통합을 위한 과제.”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조성환. “동아시아주의의 정치사상: 근대와 탈근대의 주변.”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진덕규. “글로벌리즘과 동아시아 민족주의의 반응양식.”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6호, 2001.
- 최민자. “정치학적 측면에서 본 동아시아론: 동아시아론을 위한 소고”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1호, 1998.
- 최봉영. “동아시아 사회의 전통과 근대화.”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1호, 1998.
- 최원식.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로서의 동아시아론.”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최영중.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이론, 현황 및 전망: 정치적 시각.”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 “세계화 속의 동아시아 지역문화: ‘근대국가’에서 동아시아 지역세계로.”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제9호, 2002.
- 한홍렬. “동북아 FTA 전망과 평가.” 한국동북아지식인연대 엮음. 『동북아 공동체를 향하여: 아시아 지역통합의 꿈과 현실』. 서울: 동아일보사, 2004.
- 함재봉. “아시아적 가치 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전통과 현대 엮음.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 張琢. “現代化在東亞的地域推進.” 羅榮渠 編. 『東亞現代化: 新模式與新

- 經驗』.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7.
- 加藤政洋. “グローバル化と地理學的想像力.” 『思想』九三三號, 2002.
- Akaha, Tsuneo. “Economic Cooperation in NEA: A Global Perspective.” Kap-Young Jeong, Ku-Hyun Jung and Jaewoo Choo eds. *Dynamic Transi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7.
- _____.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 Regional Order in NEA.” Kap-Young Jeong and Jaewoo Choo eds. *Towards New Dimensions of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8.
- Codignola, Luca. “The French in Early America: Religion and Reality.” Deborah L. Madsen ed. *Visions of America since 1492*.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4.
- Coles, Paul. “The Crisis of Renaissance Society: Genoa, 1448–1507.” *Past & Present*, No. 11 (April 1957).
- Crawford, Beverly. “The Causes of Cultural Conflict: An Institutional Approach.” Beverly Crawford and Ronnie D. Lipschutz eds. *The Myth of “Ethnic Conflict”: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al” Violence*. Berkeley: International Area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998.
- Dobson, Wendy. “East Asian Integration: Synergies Between Firm Strategies and Government Policies.” Wendy Dobson and Chia Siow Yue eds. *Multinationals and East Asian Integration*. Ottawa, Canada and Singapore: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and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7.
- Evans, Grant. “Introduction: Asia and Anthropological Imagination.”

- Grant Evans ed. *Asia's Cultural Mosaic: An Anthropological Introduction*. New York and London: Prentice Hall, 1993.
- Evans, Paul. "East Asian Regionalism: Supplement or Alternative to an American-Centered Pacific Orde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held by the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December 11, 2002).
- Freedman, Lawrence. "The Confrontation of the Superpowers, 1945-1990." Michael Howard and Roger Louis eds. *The Oxford History of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Jackson, Robert H.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ociety." John Baylis and Steve Smith eds.,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Kikuchi, Tsutomu. "Regionalism and Regional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Fu-Kuo Liu and Philippe Régnier eds. *Regionalism in East Asia: Paradigm Shifting?* London: RoutledgeCurzon, 2003.
- Kim, Myongsob. "Integrer pour Regner: La strategie globale de l'administration Truman et l'origine de la regionalisation tripolaire." These pour le Doctorat, Universite de Paris I-Panthéon Sorbonne, 1996.
- _____. "Declined Invitation by Empire: The Aborted Pacific Pact and the Unsolved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paper prepared for the 50 Years after the Korean War: *From the Cold War to the Making of a New World Order*, organiz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July 14-15, 2002).

- Lefebvre, Henri. “*Production de l’espace.*” N. Elias ed. *Time: An Essay*. London: Blackwell, 1992.
- Lenin, V. “The Advance of Imperialism.” *Collected Works* [1916], Vol. 22. London: Lawrence and Wishart, 1964.
- Linklater, Andrew. “Citizenship and Sovereignty in the Post-Westphalian European State.” Archibugi, Daniele, David Held and Martin Köhler eds. *Re-imagining Political Community: Studies in Cosmopolitan Democr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Liu, Fu-Kuo. “East Asian Regionalism: Theoretical Perspectives.” Fu-Kuo Liu and Philippe Régnier eds. *Regionalism in East Asia: Paradigm Shifting?* London: RoutledgeCurzon, 2003.
- Lundestad, Geir. “Empire.” Geir Lundestad ed. *Integratio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Integration, 1945-199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ummer 1999).
- McLean, Martin. “Education.” Max-Stephan Schultze ed. *Western Europe: Economic and Social Change Since 1945*. London: Longman, 1999.
- McNeill, J. R. “The End of the Old Atlantic World: America, Africa, Europe, 1770-1888.” Alan L. Karras and J. R. McNeill eds. *Atlantic American Societies: From Columbus Through Abolition, 1492-188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2.
- Pempel, T. J. “The Soft Ties of Asian Regionalis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Visions and Strategies.*” held by the

-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December 11, 2002).
- Ramanathan, Sankaran. "Internet in Asia: An Overview." Sankaran Ramamathan and Jörg Becker eds. *Internet in Asia*. Singapore: Asian Med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entre, 2001.
- Ruggie, John Gerard. "Territoriality and Beyond: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No. 47, No. 1 (Winter 1993).
- Smith, Anthony D.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Peter Gowan and Perry Anderson eds. *The Question of Europe*. London: Verso, 1997.
- Soesatro, Hadi. "Asia-Japan Co-operation Toward East Asian Integration." Ryokichi Hirono e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3.
- Tay, Simon. "ASEAN Plus 3: Challenges and Cautions about a New Regionalism." Mohamed Jawhar Hassan, Stephen Leong and Vincent Lim eds. *Asia Pacific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 the 21st Century*. Kuala Lumpur: ISIS Malaysia, 2002.

3. 기타

- 안병준. "몽치는 EU ... 흩어진 동아시아." 『중앙일보』, 2004년 5월 15일.
- 이흥구. "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해야." 『중앙일보』, 2004년 6월 14일.
-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Toward a Peaceful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Seoul: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2004).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00003c.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00003c.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2.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2.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5.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5.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7.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7.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6.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6.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8.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18.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0c.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0c.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5.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25.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43.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43.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1.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1.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7.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67.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72.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072.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603.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c11603.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s19003.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cha/s19003.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6.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6.htm) (검색일: 2004.8.31).
[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7.htm](http://europa.eu.int/scadplus/leg/en/lvb/129007.htm) (검색일: 2004.8.31).
[Http://www.iue.it/RSCAS.About](http://www.iue.it/RSCAS.About) (검색일: 2004.8.17).
[Http://www.nabh.go.kr/warp/app/home/kr_home](http://www.nabh.go.kr/warp/app/home/kr_home) (검색일: 2004.6.11).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윤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흠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사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F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운,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